2025. 12. 12.(금)
제4차 본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 과 보 고 서

고 양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1022

제출연월일: 2025. 12. 12.
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장

1. 제안이유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획행정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붙임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음.

2. 감사실시 기간: 2025. 11. 14.(금) ~ 11. 21.(금) [8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4호)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제5~6호)
○ 소통협치담당관 ○ 감사관 ○ 언론홍보담당관 ○ 기획조정실(기획정책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인적자원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 ○ 일산동·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 ○ 고양도시관리공사(경영기획실, 경영지원처, 체육문화1·2처)	○ 고양시자원봉사센터 ○ 고양연구원 ○ 고양시체육회 • **성격 및 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위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6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 **감사이유** -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고양연구원, 고양시체육회의 경영실태 및 회계관리의 적정 여부를 감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원	
				직 위	성 명
기획행정 위 원 회	8명	공소자	김수진, 권용재, 김영식, 엄성은, 이종덕, 이철조, 정민경	전문위원 주 무 관 주 무 관 정책지원관	김영철 이인수 손인선 이세훈, 이상훈 최종화, 황광석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위원회별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부서)	감사 장소	내용	비고
	일자	시간				
기획행정 위 원 회	11. 14. (금)	14:00~ 18:00	○ 소통협치담당관 ○ 언론홍보담당관	위원회 회의실	감사	
			○ 11. 15.(토)~11. 16.(일)			
	11. 17. (월)	10:00~ 16:00	○ 기획조정실(기획정책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위원회 회의실	감사	
	11. 18. (화)	10:00~ 16:00	○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인적자원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위원회 회의실	감사	
		16:00~ 18:00	○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위원회 회의실	감사	본회의 승인대상
	11. 19. (수)	10:00~ 12:00	○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 회의실	감사	
		14:00~ 16:00	○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 회의실	감사	
		16:00~ 18:00	○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	덕양구청 회의실	감사	
	11. 20. (목)	10:00~ 16:00	○ 교육문화국 (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위원회 회의실	감사	
		16:00~ 18:00	○ 고양시체육회	위원회 회의실	감사	본회의 승인대상
	11. 21. (금)	10:00~ 12:00	○ 고양도시관리공사 (경영기획실, 경영지원처, 체육문화 1·2처)	위원회 회의실	감사	
		14:00~ 16:00	○ 감사관	위원회 회의실	감사	
		16:00~ 18:00	○ 고양연구원	위원회 회의실	감사	본회의 승인대상

다. 감사방법 및 증인출석

1) 감사방법

증인선서 ⇨ 업무실적보고 ⇨ 질의·답변

2) 증인 출석 현황

출석일시	출석대상자			감 사 장 소	비고
	기관(부서)	직 위	성 명		
11. 14.(금) **15:30~21:40**	소통협치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강경구 문영기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11. 17.(월) **10:00~23:30**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기획정책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윤경진 안영선 김보경 박천재 김윤정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11. 18.(화) **10:00~22:00**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 인적자원과장 주민자치과장 민원여권과장 회계과장 재산관리과장	김형기 이경희 박영산 주은주 김복희 이학천 한철희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11. 18.(화) **22:10~23:55**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센 터 장 사 무 국 장	이완범 강정원	〃	
11. 19.(수) **10:00~12:00**	일산서구청	구 청 장 자치행정과장 시민봉사과장 일산1동장 일산2동장 일산3동장 탄현1동장 탄현2동장 주엽1동장 주엽2동장 대화동장 송포동장 덕이동장 가좌동장	신영호 조정하 박민호 유경옥 김관양 박광영 김선우 김석재 이권재 지창섭 이봉재 박성식 신동엽 이해승	일산서구청 회 의 실	

출석일시	출석대상자			감 사 장 소	비고
	기관(부서)	직 위	성 명		
11. 19.(수) 14:00~15:40	일산동구청	구 청 장	박노선	일 산 동 구 청 회 의 실	
		자치행정과장	김경찬		
		시민봉사과장	이재란		
		식 사 동 장	최상덕		
		중 산 1 동 장	최정원		
		중 산 2 동 장	한유희		
		정 발 산 동 장	안수길		
		풍 산 동 장	유은숙		
		백 석 1 동 장	오미근		
		백 석 2 동 장	원만철		불출석
		마 두 1 동 장	김동숙		
		마 두 2 동 장	조재원		
		장 항 1 동 장	김동원		
		장 항 2 동 장	양정길		
		고 봉 동 장	차형수		
11. 19.(수) 16:30~18:00	덕양구청	구 청 장	한찬희	덕 양 구 청 회 의 실	
		자치행정과장	왕연우		
		시민봉사과장	정용호		
		주 교 동 장	이은정		
		원 신 동 장	윤정원		
		흥 도 동 장	이용진		
		성 사 1 동 장	김태일		
		성 사 2 동 장	안진희		
		효 자 동 장	윤미옥		
		삼 송 1 동 장	이종복		
		삼 송 2 동 장	최현석		불출석
		창 릉 동 장	김미정		
		고 양 동 장	장재영		
		관 산 동 장	남기준		
		능 곡 동 장	김미경		
		화 정 1 동 장	이효섭		불출석
		화 정 2 동 장	양상윤		
		행 주 동 장	김희택		
		행 신 1 동 장	최만호		
		행 신 2 동 장	강경아		

출석일시	출석대상자			감 사 장 소	비고
	기관(부서)	직 위	성 명		
11. 19.(수) **16:30~18:00**	덕양구청	행 신 3 동 장 행 신 4 동 장 화 전 동 장 대 덕 동 장	윤순희 이종찬 신형식 전종학	덕 양 구 청 회 의 실	
11. 20.(목) **10:00~20:20**	교육문화국	교 육 문 화 국 장 평 생 교 육 과 장 체 육 정 책 과 장	이승재 박상희 박종민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11. 20.(목) **20:30~23:40**	고양시체육회	회 장 사 무 국 장 체 육 과 장 경 영 지 원 팀 장 체 육 운 영 팀 장	代정연만 공 석 배성철 김종훈 이수정	〃	불출석
11. 21.(금) **10:00~16:40**	고양도시관리공사	사 장 경영관리본부장 경 영 기 획 실 장 경 영 지 원 처 장 체 육 문 화 1 처 장 체 육 문 화 2 처 장	강승필 이종경 한유연 최영윤 진태운 박동준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11. 21.(금) **17:30~20:30**	감사관	감 사 관	임경호 代이종경	〃	불출석
11. 21.(금) **20:30~23:55**	고양연구원	원 장 부 원 장 행정사회연구실장 자족경제연구실장 (미래전략데이터센터장) 도시환경연구실장 기획경영조정실장 경제자유구역센터장 탄소중립지원센터장	김현호 김남준 문정화 김용덕 백주현 윤신희 안지호 임지열	〃	

5. 주요감사 실시내용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소통협치 담당관	□ 「고양시에 바란다」 민원 처리 미흡 및 관리 소홀 지적 ○ 타 기관 이첩 민원에 대한 소극적 처리 및 장기 민원 현황 파악 부재 - 지축지구 ATM 설치 요청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이 시의 직접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타 기관(은행 등)의 구체적인 불가 사유나 답변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 '수용 곤란'으로 처리한 소극적인 행정 처리를 지적함. ※ 해당민원의 담당부서는 소통협치에서 직접 담당한 민원으로, 소관은 아니지만 시가 은행에 공문을 보내지 않는 적극 행정 미비 사례 지적 - 정발산동 횡단보도 설치 민원(2025년 6월 9일 접수, 일산동부경찰서 협의 건)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되는 시점까지 담당 부서장이 추진 현황이나 진행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업무 소홀을 질타함. - 민원 처리에 있어 단순히 답변을 강요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여 민원인에게 안내할 것과 장기 진행 중인 민원에 대한 철저한 현황 파악 및 보고를 주문함. □ 민원 소통 창구의 다원화에 따른 시민 혼란 및 행정 비효율 지적 ○ 민원 접수 창구의 과도한 세분화 및 중복성 문제 - 현재 고양시의 민원 소통 창구가 '직소민원', '현장 민원25', '고양시에 바란다', '국민신문고' 등으로 지나치게 다원화되어 있어, 시민들이 어느 창구를 이용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특히 ‘고양시에 바란다’의 경우 단순 민원 접수보다는 정책 제안 창구로의 전환을 제안했으나, 여전히 민원 현황으로 실적이 관리되고 있으며 ‘시민의 소리(제안합니다)’와 ‘국민신문고’ 간의 기능 중복이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함. - 창구 다원화가 행정력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고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창구를 통합하거나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민원 처리 결과 통보 방식의 개선 요구** ○ ‘장기 검토’ 회신에 따른 시민 희망 고문 방지 -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상 민원 처리 결과에 ‘장기 검토’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민원인에게 해결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주는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함. - 예산 수반 등의 이유로 즉시 처리가 어려운 경우라도, 단순히 ‘장기 검토’로 분류하기보다 해결 가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여 불가한 사안은 솔직하게 안내하는 등 민원 처리 결과의 완결성을 높일 것을 주문함. **□ 갈등관리 매뉴얼이 형식적으로 존재할 뿐 실제 갈등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점을 우려하며,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과 숙지 방안 마련을 주문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집단민원과 갈등 상담을 위한 전용 공간을 확보할 것을 제안 □ 원스톱 민원서비스와 상담·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 언급 □ 민원·갈등 해결 사례집을 제작·공유하고, 공직자의 민원 응대 태도와 대화법을 개선하며,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안 제시와 정책 발상 개선을 통해 민원처리 및 갈등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 □ '고양시에 바란다'와 '국민신문고'간 민원 데이터 불일치 지적 □ 동장 소통 창구 운영의 실효성 확보 및 평가 체계 강화 요구 □ 민원 처리 성과에 대한 홍보 및 공유 부족 지적 □ '시장과의 대화의 날' 운영의 제한성 및 소극적 행정 지적 ○ 참석 인원이 3~7명 내외로 소수이고 월 1회 빈도로 제한적이며, 운영 횟수 또한 월 1회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함. ○ 면담 대상자 선정 시 소통협치담당관에서 자체적인 선별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시민들이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할 때는 절박한 심정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효율성이나 법령상의 이유로 과도하게 필터링되는 측면이 있음.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다루기 힘들거나 어려운 민원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운영 횟수를 늘리고,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것을 주문함. **□ 「고양시에 바란다」 주요 민원 사항의 진행 사항 점검 및 신속한 해결 촉구** ○ 식사지구 체육공원 준공 지연(소송 관련), 원당 미래타운, 고양동 소각장 건립 반대 등 장기 미해결 민원으로 인한 주민 불편 가중을 지적함. **□ 집단 민원 예방을 위한 선제적 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 주문** ○ 반복적·다발적 집단 민원에 대한 유형별 관리 매뉴얼 고도화 - 덕이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사례를 언급하며, 관계 부서가 법과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인허가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주민 소통 부재로 인해 직권취소 요구, 소송 우려 등 극심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 현실을 지적함. - 현재 배포된 갈등 관리 매뉴얼이 일반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법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 저항이 예상되는 기피 시설이나 분쟁 시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부재함을 질타함. - 진행 중인 ‘고양형 공공갈등 관리 구축 연구용역’에 과거 반복적으로 발생한 집단 민원(건축 인허가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담을 것을 주문함. 또한, 갈등 예상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 전결권을 상향 조정(국장, 시장 등)하고 인허가 전 주민설명회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적극 행정’ 절차의 도입을 당부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미이행 및 부실 처리 질타** ○ 공공갈등 관리체계 홍보 예산 미편성 및 소극적 대처 - 2024년도 행감에서 공공갈등 관리체계에 대한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별도의 홍보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나, 부서 자체 판단으로 예산을 미편성하고 기존 인쇄물 및 회의 참석 등으로 갈음한 점을 지적함. - 107만 고양시 인구 대비 홍보 실적이 약 1,200명(직능단체 등)에 불과하여 홍보 효과가 미미함을 지적하고, 의회의 시정 요구를 임의로 판단하여 이행하지 않은 소극 행정을 질타함. ○ 「직소민원」 정례화 계획 수립 미비 및 결과보고서 작성 오류 - 전년도 감사에서 시장과의 만남(직소민원) 정례화 계획 수립을 요구했으나, 2025년도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지 않았으며 실제 운영도 6회에 그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함. - 특히 행감 처리결과 보고서에 2025년 추진 실적이 아닌 2024년도 실적을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한 명백한 작성 오류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부서장의 책임 있는 자세와 보고서 재작성을 주문함. □ **「고양형 공공갈등 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 관리 부실 지적** ○ 용역 과업 관리 소홀 및 지연 - 당초 5~6월 완료 예정이었던 연구용역이 12월까지 지연된 사유를 추궁함. 착수 및 중간보고회에서 의원이 제시한 ‘실무 중심의 연구’ 요구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지 않고, 용역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과업을 추가하여 납기를 지연시킨 부서의 업무 태만을 강력히 질타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감 사 관	- 연구용역 결과가 실제 조례 제정 및 실무 매뉴얼에 즉각 반영되어야 함에도, 부서의 관리 부재로 인해 행정의 적시성을 놓친 점을 지적함. □ **조례 위반 및 민원 데이터 통합 관리 미흡 지적** ○ 특이민원 발생 시 시장 보고 의무 위반 - 「고양시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특이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부서장 전결 또는 구두 보고로 갈음하여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함. 자의적인 법령 해석을 경계하고 조례 준수를 촉구함. ○ 민원 데이터의 유기적 연계 부족 - 현장민원, 국민신문고, 직소민원 등 다양한 민원 창구의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분석·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특히 시장의 동 방문 시 접수된 민원이 소통협치담당관실과 공유되지 않고 자치행정 부서에서 별도 관리되는 칸막이 행정을 지적하며 통합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함. □ **고양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감사 실효성 제고** ○ 체육회 대상 자체 감사의 한계 지적 및 고강도 특정감사 필요성 강조 -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고양시체육회에 대해 보조금 정산 등 부분적인 감사를 2회 실시하였으나, 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내부 갈등(고소·고발)과 방만한 운영 실태를 감사관실이 사전에 인지하거나 시정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함. - 단순한 회계 감사를 넘어 조직의 구조적 문제와 내부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고강도 특정감사 실시를 검토할 것을 주문함. □ **산하기관 조직 정상화를 위한 감사관실의 적극적 역할 주문** ○ 내부 갈등으로 기능이 마비된 조직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 - 체육회 등 내부 구성원 간의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조직은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임을 지적하며, 단순한 지적 위주의 감사를 넘어 조직을 재건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안(혁신 보고서 등)을 마련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당부함. □ **주차교통과 소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조속한 마무리를 당부** □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따른 직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 협의를 요청하고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각하·기각이 명백한 사안은 신속히 종결하여 직원의 심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 □ **시 공무원과 달리 산하기관 직원은 수사 개시 사실이 기관에 자동 통보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있어, 비위 혐의자가 승진하는 등 인사 검증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을 지적** □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재정 환수 요구는 담당자 교체 시에도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끝까지 환수 완료되도록 지속 관리할 것을 주문**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언 론 홍 보 담 당 관	□ **농지법 위반과 같은 장기 미조치 사안은 단순 고발에 그치지 말고 이행강제금 부과와 원상복구 등 실질적인 후속 행정·법적 조치를 통해 행정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관리·이행할 것을 요구** □ **행정광고비 집행 기준에 대한 답변 번복 및 위증 논란 지적** ○ 전년도 행감 답변과 상반된 진술에 대한 강력한 질타 -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광고비 집행 기준(A, B, C, D 등급) 유무를 묻는 질의에 대해 당시에는 “기준이 없다” 고 답변하였으나, 금번 감사에서는 “15~20년 전부터 기준이 있었다” 고 답변을 180도 번복한 사실을 적발함. - 의원은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답변을 하는 것은 위증에 가까운 거짓말이며,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임을 강력히 지적하고 당혹감을 표명함. - 이에 대해 집행부는 표현이 부족했거나 모호했을 수 있다고 해명했으나, 의원은 행정감사에서의 답변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함. □ **물품 구매(디지털 카메라) 예산 집행 내역의 정확성 점검** - 디지털 카메라 3대 구매 내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상의 금액(869만 원)과 나라장터 금액(830만 원) 간의 차액이 발생한 사유를 추궁함. - 확인 결과, 자료에는 조달 수수료가 제외된 금액이 기재되었고 실제 계약에는 수수료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자료 제출 시 정확한 금액 기재를 당부함. (산출내역서에 조달수수료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음)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시정소식지(고양소식) 운영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주문 ○ 편집위원회 운영 투명성 제고 및 ‘맛집 코너’ 선정 기준 명확화 요구 - 2024년도 행감 지적사항이었던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회의록 미공개’ 및 ‘위원 모집 절차’ 문제가 개선되어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지속적인 투명성 유지를 당부함. - 시정소식지 내 ‘맛집 코너’가 선거법 관련 이슈로 잠정 중단된 상태이나, 향후 재개 시 특정 업체 홍보 특혜 시비가 없도록 객관적인 선정 기준(포털 검색 데이터, 방문자 리뷰 수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 G버스 TV 등 옥외광고 매체 운영 관리 미흡 지적 - G버스 TV 광고를 통해 시정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미 종료된 행사(가을꽃축제, 드론 라이트쇼 등)의 광고가 행사 기간 이후에도 계속 송출되어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정보의 오류화)를 제공하고 있음을 지적함. - 광고 대행사나 운송업체의 사정(공실 방지 등)으로 계약 기간 외 추가 노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의성이 지난 행사 광고 대신 ‘고양특례시 브랜드 홍보’나 ‘고양원픽’ 등 상시적인 정책 홍보물로 대체하여 송출할 수 있도록 콘텐츠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함. □ 고양시 홍보 예산이 타 특례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회 홍보 예산 삭감이 의정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우려. 이에 따라 타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예산 부서에 의회 홍보비 증액을 적극 요청하고, 집행부와 의회 홍보 예산을 함께 현실화하여 홍보 시너지를 높이는 선순환적·협력적 예산 구조를 구축하자고 제안 **□ 소셜기자단은 거주 요건뿐 아니라 콘텐츠 제작 역량 등 객관적 기준을 강화하고, 검증된 청년 인력을 연계해 인력 풀을 고도화** **□ 시청 누리집의 ‘보도자료’ 메뉴가 ‘고양포커스’와 혼재되어 있는 구조를 개선해, 이용자가 보도자료 원문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메뉴를 직관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 **□ 부서별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언론홍보담당관이 홍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공유해 조직 전체의 홍보 마인드를 높이도록 지원 확대를 요청** **□ 시정 홍보 매체 운영 효율화 및 콘텐츠 강화 주문** ○ 직장운동경기부 홍보 강화 및 유튜브 콘텐츠 제작 추진 -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시민 인지도가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순 홍보를 넘어 선수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은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한 부서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주요 선수뿐만 아니라 57명의 감독 및 선수단 전원의 정보를 등재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유튜브 ‘쇼츠(Shorts)’ 활성화 및 자체 제작 확대 - 예산 절감과 홍보 효과가 높은 ‘쇼츠’ 영상의 업로드 확대를 주문한 결과, 연말까지 55개 제작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 중인 점을 확인함. - 외주 제작보다 직원들이 트렌드에 맞춰 자유롭게 제작한 영상의 조회수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자체 제작 비중과 자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함. **□ 시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오류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요구** ○ 인구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시장 보고 - 누리집에 게시된 인구 통계가 외국인을 포함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이를 오인하여 부정확한 발언을 한 사실을 지적함. 부서에서 시장에게 정확한 통계 기준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을 보고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지킬 것을 요구함. ○ 정보 접근성(UI/UX) 개선 및 위원회 명칭 통일 - 누리집 메뉴에서 ‘보도자료’를 클릭했을 때 직관적으로 보도자료 게시판으로 연결되지 않고 ‘고양포커스’ 등 다른 화면이 노출되어 접근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함. - ‘고양소식 편집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시정소식지’ 등 불일치한 명칭으로 게시되어 검색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명칭을 통일하여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것을 주문함. **□ 행정 광고 및 용역 집행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행정광고 집행 기준 준수 및 특정 언론 배제 우려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행정광고 집행 시 단체장의 선호도에 따라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해치는 일임을 경고함. 기 수립된 집행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광고비를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한편, 언론사 행정광고 배제 요건(조정 신청만으로 배제 등)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부서가 배제 기간 단축 및 요건 완화(조정 결정 또는 인용 판결 시 배제) 등으로 기준을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관내 영상 제작 업체 발굴 및 참여 기회 확대 - 미디어 영상 제작 시 관내 업체 선정 비율이 저조함을 지적함. 품질이 보장된다면 관내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우선 선정하는 등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함.
기 획 조 정 실 (기 획 정 책 관)	□ **주요현안에 대한 사전보고 및 소통부재지적** ○ 「고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과 같이 의회와 집행부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 위원장에게 사전 설명이나 보고가 누락된 점을 강하게 질타함. ○ 특히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타 상임위 소속 의원에게는 설명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상임위원회를 경시하는 태도임을 엄중히 경고함. □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 태도 미흡 지적** ○ 민간위탁 관리지침 변경과 조례 상충 문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답변 준비가 미흡함을 지적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예상되는 질의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지 못하고, 질의 과정에서 반복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 **□ 저출생 대응계획(청년둥지론)의 실효성 부족 지적** - 청년둥지론 사업의 실제 혜택 가구가 20가구에 불과하여 매우 적고, 미혼과 기혼에 대한 소득 기준 등 지원 조건이 현실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정책 개선을 당부함 **□ 누릴고양 홈페이지 운영 미흡 및 제안제도 사후관리 지적** -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홈페이지인 '누릴고양'의 이용 편의성이 떨어짐에도 업무 실적에는 현행화 완료로 보고 된 점을 지적함. - 시민 제안제도를 통해 많은 제안이 채택되었으나 실제 정책으로 실행되는 사례가 적은 점을 지적하며, 시민 아이디어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당부함. **□ 고양시 공무원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직원들의 승진 기회 부족과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직개편이 지연됨에 따라 공무원 사기 저하 및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언급** **□ 시민평가단이 특정 연령대 누락 등으로 대표성과 통계적 균형을 확보하지 못해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 시민평가단 의견이 공약사업 계획·예산에 실제 어떻게 반영됐는지 구체적 사례 제시를 요구하였으며, 앞으로는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연령·지역·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해 시민평가단을 구성하고, 미달 계층이 생길 경우 보충 모집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대표성과 통계 관리의 정확성을 높일 것을 주문. □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변경 과정에서 재계약·재위탁 개념 혼동, 상위법령 및 위탁 절차의 다양성 등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의회의 '사후 동의' 방식에 대해 행정 신뢰도 하락 및 법적 책임 불분명 등의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 타 지자체에서도 드문 방식임을 강조. 공적 절차로 이미 선정된 결과가 의회 동의 과정에서 번복될 경우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조례상 동의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의 안정성과 선정 번복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시행규칙으로 동의 시점을 구체화한 집행부의 조치에 타당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 □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미흡 지적**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고가도로 하부공간 체계적 관리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가 미흡함을 지적함. 당시 처리 결과 보고서에는 '실태 조사 중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명시되었으나,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실질적인 변화나 중장기 계획이 부재함을 질타함. ○ 도심 내 소규모 교량 하부뿐만 아니라, '서울-문산 고속도로' 및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외곽순환도로)' 하부의 대규모 유휴 공간에 대한 활용 계획이 전무함을 지적함. ○ (소극적 행정 및 관리 부실 비판) 현재 다수의 하부 공간이 제설 자재 창고 등으로 단순히 행정 편의적으로 사용되거나, 불법 주차 및 적치물로 인해 관리가 되지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않고 방치되어 있음을 지적함. 아울러 타 지자체(안성시 등)의 우수 벤치마킹 사례와 비교하며 우리 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함. ◯ 서울-문산 고속도로 관리 주체와의 면담 내용을 근거로, 정당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관리권 이양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예산 확보 및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함. 또한, 시비 부족 시 국·도비 (특교 등) 확보를 통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제안함.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기 및 조례 해석의 명확성 강조** ◯ 조례 문언에 근거한 해석 제시 -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명시된 “위탁 계획 동의안을 위탁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위탁 계약 체결이나 수탁기관 선정 이전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조례의 문언적 해석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밝힘. ◯ 시행규칙의 보완적 성격 인정 - 조례에 위탁 시점이 명확히 명문화되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발생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가 시행규칙을 통해 시점을 ‘모집 공고 이전’으로 구체화한 것은, 조례를 보완하는 타당한 행정 조치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 ◯ 사후 동의 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소재 우려 - 수탁기관 선정 이후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후동의방식은 선정 결과에 의회가 개입하게 되어 추후 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함. 또한, 이는 입법부가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집행(선정) 영역을 침해하여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강조함. **□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의 위법성 및 의회 기망 지적 (위임입법 한계 및 규칙제정권 범위 초과)** ○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제4항 (수탁기관 변동 또는 재계약 시 의회 동의)의 개정 취지는 2024년 및 2025년 의회 속기록상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동의안 제출 시기를 ‘모집 공고 이전’으로 변경한 것은 상위 조례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임을 지적함. ○ 집행부가 시행규칙 개정의 근거로 삼은 법률 자문 결과가 만장일치가 아니었음에도(2대 2 등 의견 분분), 집행부의 행정 편의에 부합하는 의견만을 취사선택하여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한 점을 비판함. ○ 조례에 명시된 ’동의’의 권한을 ’부서의 희망이나 의지(바꾸고 싶다/재계약하고 싶다)’에 대한 동의로 격하시켜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의회의 실질적인 심사 권한(선정 결과에 대한 통제)을 박탈하고 거수기 역할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함을 질타함. **□ 조례 부칙(유예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에도 자의적 해석 및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위법행위 지적** ○ 조례 개정 당시 1년의 유예기간(2025. 7. 3. 시행)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내부 공문을 통해 ‘2025년 10월까지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사무’에 한하여 7월 2일 전 보고 시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임의 지침을 하달한 것은 법적 근거 없는 명백한 월권행위임을 지적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시행규칙 제8조를 통해 수탁기관 선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수탁기관과의 계약을 ‘6개월 + 3개월(총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 조례에 위임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규정 신설임을 지적함.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고양시체육회 보조금 성과평가 부실 및 공정성 결여 지적** ○ 고양시체육회 보조금 성과평가 시, 특정 종목 단체의 보조금 부정 사용이나 정산 보고 기한 미준수 사례(86건 등)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평가 항목에서 감점되지 않고 만점(또는 ‘없음’ 처리)을 받는 등 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음을 구체적 증거를 들어 지적함. ○ 성과평가를 고양연구원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연구원이 부서(체육정책과)에서 제공하는 기초 자료를 검증 없이 그대로 반영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함. 이에 따라 부서가 제공한 자료에 오류나 은폐가 있을 경우 평가 결과가 왜곡되는 문제점을 질타함. ○ 보조금 관리 및 성과평가 총괄 부서로서, 명백한 규정 위반 사항이 평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함. □ **공공운영 보험 예산의 방만한 편성 및 검증 부실 지적** ○ 자전거 보험의 비효율적 운영 지적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자전거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으나, 2024년 기준 지급률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인 44.3%로 급락한 점을 지적함. 담당 부서가 ‘보장 사항 변경(지급 조건 완화)’을 이유로 들었으나 실제 지급 조건(4주 이상 진단)은 변동이 없어, 예산 편성과정에서 부서 설명에 대한 사실 검증이 부족했음을 비판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시립합창단 상해보험의 과다 예산 편성 지적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억 7천만 원~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계약 체결액(집행액)은 100만 원~200만 원 수준에 불과하여 집행률이 1%대에 머무르는 기형적인 구조가 4년 연속 지속된 점을 지적함. 또한, 해당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 건수가 전무함에도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예산 심의 기능의 부재를 질타함. ○ 예산 편성 시 성과 검증 시스템 부재 지적 - 예산담당관이 예산 편성 시 단순히 이월액이나 불용액 수치만 확인할 뿐, 보험의 보장 조건 적절성, 지급률, 실질적인 시민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부서의 설명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이를 걸러낼 검증 절차가 미비함을 확인함. **□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점수가 낮은 이유와 평가 결과의 분석 및 활용 부족을 지적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와 미흡한 점을 파악하고, 예산 반영 및 개선에 활용할 것을 요청** **□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과학적 예산 편성 및 심의 체계 도입 요구** ○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의 필요성 강조 - 고양연구원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세븐틴 콘서트의 주변 상권 및 숙박업 매출 증대 효과 vs 국제꽃박람회의 숙박 매출 감소)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따른 숙박수요 예측 데이터(2032년 기준 약 3,136실 부족)를 제시하며,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예산 편성이 단순 지출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투자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을 강조함. ○ 예산 편성 과정의 데이터 활용 미흡 지적 - 현재 시의 예산 배분 과정에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나 지표가 결정적 근거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함. ○ 구체적 개선 방안 제시 ① 예산 편성 운영기준 수립 시 주요 사업에 대한 데이터 증빙 자료 제출 권장 ② 성과관리와 예산의 연계를 위한 데이터 지표 검증 강화 ③ 예산 담당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및 스마트시티과와의 협업 프로세스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함. **□ 고양시 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수립 여부 점검** ○ (자체 기준 부재 및 자료 제출 미흡 지적) 2025년 및 202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수립 여부를 확인하며,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고양시 자체 기준이 아닌 행정안전부 기준을 제출했던 점을 지적함. 고양시 실정에 맞는 자체적인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명확한 수립과 제출을 요구함. **□ 국도비 보조금 관리 부실 및 환류 시스템 부재 지적** ○ (집행 및 불용액 관리 소홀) 예산담당관의 사무분장에 '국도비 보조금 관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내시율 확인)에만 그치고 실제 집행 현황이나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불용액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 (예산 환류 시스템 작동 미비) 전년도 사업의 집행 결과(집행 잔액 등)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되는 환류(Feedback) 시스템이 부재하여, 객관적 데이터 없이 부서의 의지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거나 폐지되는 주먹구구식 운영 실태를 비판함. **□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에 따른 조례 위반 및 도비 확보 실패 지적** ○ (조례상 강행규정 위반)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3조에 “시장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임을 지적함. ○ (국도비 확보 지원 직무 유기) 사업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담당관이 이를 방치하여 약 100억 원 규모의 도비 확보 기회를 놓친 점을 질타함. ‘국도비 확보 지원’이라는 사무 분장에 따라 사업 부서에 예산 편성을 독려했어야 함을 강조함. **□ 주민참여예산 시정질문 후속 조치 지연 및 운영 미비 지적** ○ (자료 제출 지연 및 임의적 기한 설정) 지난 9월 시정질문 당시 시장이 약속한 ‘질적 성장 구체적 지표(참여율, 만족도 등)’ 서면 제출이 11월 행감 시점까지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함. 또한, 의원이 언급하지 않은 ‘3개월 이내 제출’이라는 기준을 부서가 임의로 설정하여 보고를 지연시킨 점을 질타함. ○ (행안부 기준 미준수)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서 양식이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행정안전부 매뉴얼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함.
	□ 중장기 재정 계획 수립 부재 확인
	○ (중장기 비전 부재) 2017년 10월 ‘고양시 중장기 재정 비전 수립’ 이후 현재까지 중장기 재정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재정 운영의 방향성 부재를 우려함.
기 획 조 정 실 (법 무 담 당 관)	□ 행정소송 승소율 저조 원인 규명 및 관리 현황 점검
	○ (행정소송 승소율 격차 지적) 감사 자료상 민사소송의 승소율은 81%에 달하는 반면, 행정소송의 승소율은 60% 미만(56%)으로 나타난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현격한 승소율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과 배경에 대해 질의함.
	○ 현재 통계상 수치는 패소로 집계되거나 승소율에 미반영된 건들이 있으나, 항소 및 상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의 현황을 확인하고, 최종 승소율 제고를 위한 부서의 대응 태세를 점검함.
	□ 고문변호사 자문 실적 편차 원인 분석 및 운영 실태 점검
	○ 고문변호사 운영 실적(2023~2025) 확인 결과, 특정 변호사는 자문 건수가 200회를 상회하는 반면, 일부 변호사는 5회 미만에 그치는 등 편차가 매우 큼을 지적하고 그 사유를 확인함.
	○ 위촉 기간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직원들이 선호하는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변호사 (신속·정확한 답변)와 자문료 한계 등으로 인해 답변을 기피하거나 단답형으로 일관하는 변호사 간의 성향 차이가 실적 편차의 주된 원인임을 확인함.
	□ **자치법규 규제 조문 정비 관련 적극 행정 사례 격려** ○ 자치법규 규제 조문 개정 대상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료 요구 시점에 부서가 자체적으로 누락된 부분을 신속히 파악하고 시정한 사실을 확인함. 이를 단순한 행정 착오 수정이 아닌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하며, 담당 부서의 발 빠른 대처와 노고를 격려함.
	□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 절차의 적정성 확인** ○ 논란이 된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필수 절차인 '조례·규칙심의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는지 질의함. 이에 대해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심의회가 개최되었으나 위원들의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되었다는 답변을 청취하고, 관련 증빙 자료 제출을 통해 절차적 실체를 검증하고자 함.
기 획 조 정 실 (정보통신담당관)	□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의 법적 오류 부실 상정 및 재추진 의지 부족 지적** ○ 지난 4월 제283회 임시회에 집행부가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이미 개정된 상위법령(시행령)을 반영하지 못하고 구법을 인용하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과의 충돌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표준안을 적용하여 부결된 점을 지적함. 입법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로서 명백한 업무 태만이자 전문성 부족임을 질타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후속 조치 미흡 및 행정 공백 우려** ○ 조례안 부결 이후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공사 해킹 사건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현실화 되는 상황에서 수정 조례안 제출 등 부서의 후속 노력이 전무한 점을 비판함.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속한 입법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함. □ **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 관리 감독 및 사고 대응 체계 점검** ○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모니터링 강화 - 고양도시관리공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정보통신 담당관이 시 본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보안 관리 규정 준수 여부까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함을 강조함. 국정원 및 상급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기술적 차단 및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구조적인 관리 체계 확립을 주문함. □ **재난에 대비해 고양시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실시간 동기화·이중화와 재해 복구(DR) 체계를 고도화하고,** ○ 전산실의 리튬 배터리 등 화재 위험 요인을 분리·개선하며 노후 장비 안전 진단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 나아가 백석 업무빌딩 등 가용 자원을 검토해 미래 데이터 수요와 AI 기반 지능형 관제를 수용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센터 이전·확장 계획을 장기적으로 마련하자고 건의 □ **시의원 행정전자서명(GPKI) 발급 관련 자의적 법령 해석 및 소극 행정 지적**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지방의회 의원은 행정기관 소속이 아니므로 GPKI 발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점을 지적함. 의원실에서 상급 기관(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 직접 질의하여 ‘발급 가능’ 답변을 받은 사실을 반박 근거로 제시하며, 부서가 사실관계 확인 소홀과 안일한 대응으로 의정 활동에 필요한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고 있음을 질타함. □ **법령 해석의 오류 지적 및 사실 확인 요구**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는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의회도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담당관이 ‘행정기관’의 범위에서 의회를 배제하는 등 법령 해석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함. 이에 대해 인증 발급 기관에 공식적으로 재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함.
고 양 연 구 원	□ **산하기관(고양시체육회) 성과평가 검증 부실 지적** ○ 외부 평가기관으로서의 독립적 검증 기능 상실 및 평가 신뢰도 저하 - 고양시체육회 성과평가 시, 담당 부서의 1차 평가 점수(95점)와 연구원의 2차 평가 점수(88점)가 모두 ‘우수’ 등급으로 산출되었으나, 의원이 직접 정산 보고서 등 원데이터를 전수 조사한 결과 실제 점수는 ‘미흡’ 등급(65점) 수준임을 밝혀냄. - 정산 보고 기한(2개월) 위반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운영비 부정 수급 등 감점 요인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피평가 기관이 제출한 선별된 자료에만 의존하여 만점을 부여하는 등 부실하게 평가한 사실을 질타함. - 박사급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 연구기관이 단순히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외부 평가의 취지를 무색하게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하는 행위임을 지적하며, 향후 평가 시에는 교차 검증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수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함. **□ 시민 체감형 정책 연구 수행 노력에 대한 격려** ○ 현장 중심의 연구 성과 및 전문성 높이 평가 - 최근 행정복지센터의 의뢰로 수행된 2건의 연구 과제(의원 지역구 관련)가 지역 사회의 현장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하고, 실제 행정에 적용가능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이러한 시민 친화적 연구 성과는 연구원들의 전문성과 성실함에 기인한 것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함. **□ 수의계약 현황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제출하는 방식이 계약 기간 확인(단기/장기 등)에 혼란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고 파악하기 용이한 방식으로 서식을 변경할 것을 제안** **□ 초과근무 상한제 운영 현황 점검** **□ 청사 이전에 따른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와 함께, 상반기에 있었던 연구직과 행정직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조율을 통해 화합할 것을 당부** **□ 학교 환경개선 사업 예산 편성 및 운영 방향 점검** ○ 학교 시설 환경개선 예산 축소에 따른 학부모 우려 및 대책 미비 지적 - 2025년도 학교 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교육청 협력사업(대응투자) 15억 원, 시 자체 공모사업 10억 원 등 총 25억 원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규모로 편성되어, 기존 지원 규모(약 38억 원) 대비 약 13억 원이 감액된 사실을 확인함. - 집행부는 교육청의 책무 강조 및 자체 공모사업 전환을 이유로 들었으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시의 교육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시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력히 지적함. - 감액된 13억 원 상당의 예산이 다른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배치되었는지 불분명하며, 향후 학교 현장의 수요가 발생할 경우 추경 편성을 통해 부족분을 확실히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따져 물음. **□ 온마을 배움지원센터(원클릭 시스템) 및 마을활동가 운영 실태 점검** ○ 협력 마을활동가 인력풀 관리 부실 및 검증 시스템 부재 지적 - 2019년부터 운영된 ‘협력 마을활동가’ 인력풀이 별도의 활동 기간이나 갱신 절차 없이 한 번 등록되면 계속 유지되는 구조로 운영되어, 활동 실적이 전무한 강사들이 누적되는 등 인력풀 관리가 방치되어 왔음을 지적함. - 단순히 자격증 유무만으로 강사를 등록시키고 선발 기준이나 검증 절차가 부재하여, 공교육 현장에 투입되는 강사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학부모나 일반 시민이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폐쇄적인 시스템의 문제점을 질타함. - 학교 정규 수업이나 방과 후 수업을 대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후 제대로 된 정비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인력 나열이 아닌 실질적인 검증과 경쟁력을 갖춘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할 것을 주문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학교 환경개선 사업 예산 편성 방향 확인 - 학교 시설 환경개선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교육청과의 매칭 사업 비율을 줄이고 시 자체 공모사업 비중을 늘리는 방향성에 대해 질의함. - 본예산 편성액이 전년도 총 투입 예산(추경 포함)보다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 자체 사업의 수요가 많거나 시급한 경우 추경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을 당부함 □ 성심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 집행 내역과 관련하여 예산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지붕, 연결통로 등) 보강에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점을 지적하고 예산 집행 후 남은 잔액의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 □ 학교 체육시설 공유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를 확보한 성과에 대해 격려함 □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학교 시설 환경 개선사업 및 교육경비 지원 예산의 분포와 지원 횟수의 편차를 분석한 결과 일부 특정 학교에 지원이 집중되고, 일부 학교는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편차가 심각함을 지적함 □ 프로그램 사업 등 교육경비의 상당 부분(약 100억 원)이 교육청 매칭이 아닌 시비 100%로 지원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획일적 지원을 벗어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교육청 주도 사업 선정 방식의 문제점 및 시의회 역할 확대 요구** ○ 학교 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시비 50%가 투입되는 매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상 학교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교육청에 편중되어 있어 고양시와 시의회의 역할이 사실상 전무함을 지적함. ○ 교육청이 도비 확보 및 도의원 지정 사업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 정작 시비를 부담하는 고양시의 시급한 현안이나 지역구의 학교 환경 개선 요구가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함. ○ 시 예산이 50% 투입되는 만큼, 전체 예산의 일정 비율(20~30%)에 대해서는 고양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천하거나 선정할 수 있는 ‘할당제(Quota)’ 도입 등 구체적인 권한 확보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할 것을 강력히 주문함.
교 육 문 화 국 (체 육 정 책 과)	□ **고양시체육회에 대한 부실한 성과평가 및 관리 감독 문제** ○ 부적정한 성과평가 점수 산정 지적 - 고양시체육회가 3년 넘게 파행을 겪고 운영상 미숙함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부서 평가 결과가 ‘매우 우수(95점)’로 산정된 것은 실제 운영 실태와 심각한 괴리가 있음을 지적함. - 세부 지표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기한 준수’ 항목에서 다수의 종목단체 정산보고서가 지연 제출(6일 이상 지연 포함)되었음에도 감점 없이 만점을 부여하였으며, ‘예산 집행 실적’ 역시 잔액이 18% 이상 발생(경기도 체육대회 등)했음에도 만점으로 평가한 명백한 오류를 적발함. - 특히 ‘부정수급 등 예산 낭비 사실’ 항목 평가 시,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2024년 4월 발생한 부적정한 퇴직금 지급(근로계약 1년 미만자에게 운영비로 지급)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없음(0점)’으로 처리하여 감점(-20점)을 적용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함. ○ 보조금 정산 지연 및 관리 소홀 - 각종 체육대회(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나, 다수의 종목단체 및 체육회에서 이를 지연 제출하고 있으며, 정산보고서에 날짜조차 기재되지 않은 등 관리 감독이 부실함을 지적함. - 2024년 경기도체육대회(5월 개최) 보조금 집행 잔액(약 699만 원)이 체육회 직원의 임금 체불 소송에 따른 가압류로 인해 반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사업 종료 후 즉시 정산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한 행정 태만임을 질타함. **□ 고양시체육회 사무국 운영 및 복무 관리의 총체적 부실**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및 근태 관리 부실 - 사무국 특정 팀장의 시간외수당 수령액이 월 급여 포함 700~900만 원에 육박하고, 주임급 직원도 500~600만원 정도로 수령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과도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실태를 지적함. - 휴일에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이유로 초과근무를 신청하거나, 사전 허가서 작성 없이 지문만 태그하여 수당을 수령하는 등 복무 규정 위반 및 도덕적 해이가 만연함을 지적함. ○ 업무용 차량 및 공금 부적정 사용 - 업무용 차량 사용 시 4시간 사용(1만 원)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1시간 30분~2시간 30분 정도로 운행하는 등의 허위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기록을 통해 출장비를 부적정하게 수령한 의혹을 제기함. - 체육회 운영 미숙으로 발생한 임대료 연체 이자 및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등을 개인 귀책이 아닌 이사회비(공금 성격)로 대납한 관행을 질타함. **□ 직장 내 직원들 간의 고소 고발 갈등으로 업무마비** ○ 분리조치의 적정성 문제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주장 직원이 가해 직원과 분리 조치됨 - 1명은 유급병가 조치로 이미 분리가 되었음에도 나머지 1명은 정상출근 대신 재택근무한 것을 지적함. - 체육회 내부 직원 간의 잦은 고소·고발과 갈등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단순히 민간단체라는 이유로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소극적 태도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상해보험 가입 검토** ○ 지도자 처우 개선 요구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뿐만 아니라 훈련을 함께하는 지도자(감독, 코치)들도 부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포함한 단체 상해 보험 가입을 검토하여 안전한 훈련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함. **□ 직장운동경기부 단체보험 운영 부실 및 자료 제출 태만** ○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질타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지난 5년간(2021~2025) 단체보험 청구 및 지급 내역 자료를 요구했으나, 부서에서는 ‘지급 건수 0건’이라는 사실과 다른 부실한 자료를 제출함. - 실제로는 2022년 32건, 2023년 40건 등 매년 다수의 보험 지급 내역이 존재했음에도, 담당자가 보험 갱신 시 전년도 기록을 누락하거나 확인하지 않아 위증에 가까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를 강력히 질타함. ○ 실효성 없는 단체보험 가입 및 예산 낭비 지적 - 매년 약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보장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상해 치료’ 보장이 미흡하거나, ‘4일 이상 통원 시’에만 지급되는 등 면책 조항이 많아 실질적인 혜택이 없음을 지적함. - 보험사가 운동선수 상해 보험 인수를 기피한다는 이유로 4년 연속 특정 업체(DB손해보험)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오면서도, 타 견적 비교나 보장 내역 개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함. - 현재의 보험은 예산 낭비에 가까우므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선수들이 빈번하게 겪는 부상에 대해 실질적인 ‘상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 보험으로 재설계할 것을 주문함. **□ 여성 풋살대회 개최 장소 및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지적** ○ 여성 풋살대회의 예산이 8천만 원으로 전국대회 규모(통상 5천만 원)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운동장이 아닌 고가의 대관료가 발생하는 킨텍스 전시장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예산 낭비 소지가 큼을 지적함. 날씨 영향을 이유로 실내 전시장을 사용하는 것은 풋살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종목의 통상적인 개최 방식과 맞지 않음을 비판함. ○ 대회 참가자 수 추계 및 대관료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8천만 원이라는 보조금 책정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비용 추계가 부실했음을 지적함. **□ 고양시 태권도시범단 이동 수단 및 안전 지원 미비 지적** ○ 초·중·고등학생 55명으로 구성된 태권도시범단이 연간 30회 이상의 행사를 소화하면서, 무거운 격파 장비와 개인 용품을 각자 대중교통이나 지도자의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위험한 실태를 지적함. ○ 고양시를 대표하는 시범단의 자긍심 고취와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장비 운송 및 선수 이동이 가능한 승합차 렌트 또는 구매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함. **□ 유휴 부지를 활용한 전천후 체육시설 확충 제안** ○ 안성시의 사례(20개 구장 중 18개가 전천후 구장)를 들어, 고양시 내 고가(교량) 하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어르신들이 기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을 조성할 것을 제안함.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지연 및 의회 경시 풍조 지적** ○ 자료 제출 기한 미준수 및 소통 부재 질타 -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하여 10월 20일 자료를 요구하고 10월 30일까지 제출 기한을 지정하였으나, 사전 협의나 연락 없이 11월 11일에야 자료가 제출되어 내실 있는 감사 준비를 저해한 사실을 강력히 지적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특히 데이터 분석을 위해 엑셀(Excel) 형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이 불가능한 스캔 된 PDF 파일로 제출하여 의정 활동을 방해한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를 질타함. **□ 고양시장애인체육회 관리 감독 부실 및 운영 파행** ○ 장기간 지도 감독 부재 및 다수의 비위 적발 - 고양시장애인체육회가 2012년부터 2024년까지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주무 부서의 정기 지도 점검이나 감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는 주무 부서의 심각한 직무 유기임을 지적함. - 2024년 첫 지도 점검 결과, 공용차량 사적 이용 266회, 허위 출장 284건, 시간외근무 부당 수령 등 총 18건의 비위 사실과 약 990만 원의 환수 조치가 발생한 점을 들어 총체적인 관리 부실을 질타함. ○ 조직 운영의 투명성 결여 및 시정 요구 불이행 - 2024년 지도 점검에서 지적된 ‘홈페이지 내 업무분장표 (담당 업무 및 연락처) 미게시’ 사항이 감사 당일(1년 경과)까지도 시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임을 경고함. - 경영공시 대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공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함. **□ 예산 구조의 비효율성 및 인력 운영 문제** ○ 사무국 운영비 대비 사업비 비율의 불균형 - 2025년 기준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약 3억 9천만 원)와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단체 지원 예산(약 4억 6천만 원)이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큰 차이가 없음을 지적하며, 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가 과다하여 실제 체육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이 퇴색되고 있음을 우려함. ○ 근태 관리 시스템의 미비 - 출퇴근 기록(세콤)이 초과근무 시에만 퇴근 시간이 기록되거나 수기 대장으로 관리되는 등 근태 관리 시스템이 전산화되지 않아 부정수급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함.
고양시체육회	**□ 고양시체육회 사무국 운영 부실 및 도덕적 해이 지적** ○ 예산 삭감 상황에서의 무리한 초과근무 및 임금체불 소송 제기 - 2024년도 예산이 50% 삭감되어 기본급만 지급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초과근무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사전 허가서를 작성 및 결재한 부서장의 행태를 강력히 질타함. - 특히, 생활체육지도자들은 현장 수업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업무에 투입되어 불필요한 초과근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직원은 근무 시간을 부풀려 수당을 수령한 정황을 지적함. - 예산 부족으로 수당 지급이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근거로 체육회를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임금체불)을 제기하고 보조금 통장까지 압류되게 만든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특정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및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 ○ 반복되는 규정 위반 및 감사 지적사항의 개선 미흡 - 2023년도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22건의 처분 요구 사항(개인정보 관리 소홀,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가족수당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부당 지급, 위원회 급량비 과다 지출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체육회의 총체적 행정 난맥상을 지적함. - 성과급 지급 부적정, 공무 국외여행(라오스) 시 심사 위원회 미개최 및 결과 보고 미등록, 휴직자 복무 관리 소홀, 법인카드(하이패스) 사적 유용 등 위법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을 확인함. - 개인정보가 담긴 채용 서류(신분증 사본 등)를 파기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징계 의결 요구를 묵살하여 시효를 넘기는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질타함. **□ 보조금 정산 지연 및 회계 관리 부실** ○ 보조금 정산 보고서 지연 제출 및 통장 압류 방치 - 관련 조례상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를 마쳐야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체육대회 등 주요 사업의 정산이 수개월씩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함. - 임금체불 소송으로 인해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 통장(약 680만 원 잔액)이 압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 없이 방치하여 행정 신뢰를 추락시킨 점을 추궁함. **□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결여 및 문서 위조 의혹** ○ 회원종목단체장 연임 심의 과정의 절차적 하자 - 회원종목단체 임원 연임 심의 시, 정량평가는 사무국 직원이 임의로 채점하고 위원들은 정성평가만 수행하도록 유도한 것은 규정에 없는 자의적 해석임을 지적함. - 서면 결의서에 서명된 위원들의 필체가 3일 간격임에도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불구하고 육안으로 식별 가능할 정도로 상이하거나, 대리 서명이 의심되는 정황(필체 불일치)을 포착하여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함. □ 주요 시민 체육 사업의 관리 부실 및 정보 접근성 결여 지적 ○ 체육회 내부 혼란으로 인한 본연의 사업(스포츠클럽 등) 관리 소홀 - 학교시설공유제, 초등 스포츠클럽, G-스포츠클럽 등 시민과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사업들이 체육회 내부 정상화 문제로 인해 제대로 점검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우려함. -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체육회 조직의 업무 과부하와 내부 갈등으로 인해 해당 사업들이 원활하게 관리·감독되고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명함. ○ 홈페이지 기능 마비로 인한 시민 정보 접근 차단 - 초등 스포츠클럽 등 주요 사업의 신청 방법과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공지사항 892번 글을 확인하라'는 안내만 있을 뿐 실제 공지사항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지적함. - G-스포츠클럽의 종목 변경 등 개선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시민들이 변경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임을 질타하며, 기본적인 홍보 채널의 정상화를 촉구함. ○ 보조금 사업의 위탁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제기 - 체육회의 운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에서 필수 체육 사업들을 반드시 체육회에 위탁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체육정책과 직접 관리 가능 여부를 질의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체육회 예산 집행의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체육회 발전을 기대 □ 조직 내 갈등과 리더십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임원진·이사회·대의원 간 결속을 강화하고, 내부 신뢰 회복과 직원 사기 진작, 인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 □ 타 도시 벤치마킹, 공청회·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 □ 고양시체육회 사무국의 임대료가 사실상 동일한 성격임에도 '사무국'과 '사무실'로 나뉘어 서로 다른 예산 항목으로 편성·집행되어 비효율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민선 전 관행을 정리하고 주무부서와 협의해 내년부터 임대료 예산 항목을 통합·정비하는 등 체계적인 예산 구조로 개선할 것을 요청 □ 학교시설 공유제 사업에서 한 명의 지도자가 여러 종목을 동시에 맡는 구조와 자격·역할(수업 수행, 안전관리 등)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2019년경부터 이어진 사업인 만큼 누적된 문제점을 점검해 구체 자료를 제출한 뒤 연말 종료 후 진단 및 내년도 운영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개선할 것을 요구 □ 학교생활체육지도사 자격 요건 및 전문성 검증 ○ 학교시설 공유제 운영 시, 한 명의 지도자가 배드민턴과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농구 등 성격이 상이한 종목을 동시에 지도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며, 채용 과정에서의 자격 요건 및 전문성 검증 체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공용차량 관리 부실 및 반복적 회계 부정 지적 ○ 공용차량 사적 유용 및 운행일지 미작성 등 총체적 관리 부실 - 과거 감사 지적사항을 확인한 결과, 공용차량 운행일지 미작성 275회, 하이패스 사적 사용 221회 등 방만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환수 조치(출장여비 약 119만 원, 하이패스 약 21만 원 등)가 이루어졌음에도 신뢰 회복이 미흡함을 질타함. - 3억 원 이상 보조금 단체에 대한 외부 회계 검증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정산이 1년씩 지연되는 등 회계 투명성이 결여된 상황을 지적함. □ 초과근무수당 청구의 허위성 및 임금체불 주장의 모순 규명 ○ 수기 근무대장과 보안시스템 기록 불일치 포착 - 체육회 측이 주장하는 임금체불 내역 중 상당 부분이 초과근무수당임에 주목하여, 수기 작성된 ‘초과근무 확인 대장’과 실제 ‘보안시스템(지문인식) 입출입 기록’을 대조함 - 대조 결과, 수기 대장에는 22:00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보안시스템 기록상으로는 20:37, 20:47 등에 퇴청한 기록이 다수 발견됨. - 근무 시간을 부풀려 허위로 수당을 청구하고 이를 근거로 임금체불을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홈페이지 관리 소홀 및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 예산 부족을 핑계로 한 필수 정보(조직도, 업무분장) 누락 - 체육회 홈페이지 내 기구표, 업무분장, 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가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하자, 유지보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었으나, 2025년도 예산안에 홈페이지 관리비(240만 원)가 편성되어 있음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순을 추궁함. □ 생활체육진흥조례의 자의적 해석에 대한 시정 요구 ○ 위탁 사업 독점 논리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지적 - 체육회가 주요 체육 사업을 독점적으로 위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생활체육진흥조례’를 제시했으나, 해당 조례는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일 뿐 체육회만을 지정하는 강행 규정이 아님을 명확히 지적함. - 집행부의 편의주의적인 조례 해석으로 인해 타 기관이나 방식의 사업 수행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음을 비판함.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 청원경찰 근무환경 개선 및 소통 강화 ○ 청사 1층 청원경찰 근무지 파티션 설치 및 근무 여건 점검 - 위원장은 청사 1층 로비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이 지하 및 엘리베이터에서 유입되는 외풍으로 인한 추위를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가림막을 설치한 상황을 목격하고, 이들이 정식으로 개선을 요청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언급함 - 이에 대해 행정지원과는 위원장의 지적 및 청원경찰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 2일 전 민원인 응대를 위한 전면 투명창과 측면 바람막이가 포함된 파티션 형태의 근무 부스를 신속히 설치하였음을 보고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위원장은 신속한 조치에 대해 격려하면서도, 청원경찰과 같이 고충을 직접적으로 건의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애로사항을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챙겨줄 것을 당부함. **□ 국제 우호 교류 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내실화** ○ 교류도시 선정 기준 명확화 및 성과 관리 체계 구축 - 고양시의 국제 우호 교류 사업이 도시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행정 혁신 등 실질적인 목적 달성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보완을 요구함. - 교류도시 선정 과정에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각 부서가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함. - 교류 이후 실적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시민 체감형(교육, 문화, 관광 등) 교류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을 당부함. **□ 직원 단체보험 계약 방식 변경 및 예산 효율성 제고** ○ 단체보험 입찰 유찰 및 수의계약 전환 사유 점검 - 2023년 경쟁 입찰로 진행되었던 직원 단체보험이 2024년, 2025년 연속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경위와 예산액 대비 지급액 현황을 점검함. - 행정지원과는 보장 항목 확대(암 진단비 상향 등) 및 보험금 지급액 증가(2024년 예산 16.6억 원 대비 지급액 21억 원 등)로 인해 보험사들의 입찰 참여가 저조하여 수의계약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향후 단체보험 계약 시 보장 내용과 지급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함. **□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협소한 구내식당 문제를 지적하고, 공간 부족이 근본 원인인 만큼 인근 건물 임대 등으로 식당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 **□ 비서실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절차 위반 및 자료 제출 부실 지적** ○ 공문서 작성 및 결재 절차 누락 등 행정 난맥상 질타 - 비서실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 기안 및 결재, 문서 등록 등 필수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인 날인 등만 수기로 처리하여 이메일로 접수한 사실을 적발함 -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그림자 행정’ 이자 행정 시스템의 붕괴라고 강하게 질타함. - 또한, 의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 ‘취하 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제출 건수를 축소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했음에도 ‘원본이 없다’는 사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의회를 기망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함. ○ 언론중재위원회 신청 업무의 소관 부서 및 프로세스 재정립 촉구 - 비서실의 업무 분장에 언론중재위원회 신청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자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월권행위임을 지적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해당 사업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업 부서가 신청 주체가 되고, 언론홍보담당관이 이를 총괄 지원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사무 분장에 명확히 적시할 것을 주문함. **□ 시장 공무국외출장 규정 위반 및 결과보고서 부실 작성 시정 요구** ○ 사전 심사 및 사후 결과 보고 규정 준수 미흡 지적 - 시장의 공무국외출장 33건 중 다수가 출장 계획서 제출 기한(7일 전) 및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귀국 후 20일 내)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규정에 따른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필수 첨부 서류인 숙박비 영수증, 항공 마일리지 적립 내역, 준비금 증빙 등이 다수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행정지원과가 주관 부서로서 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 의무를 태만히 했음을 질타함. ○ 즉흥적 출장 지양 및 계획적 출장 관리 시스템 도입 촉구 - 명확한 연간 출장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출장이 많아 동일 국가 및 주제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최소 1년 단위의 장기적 계획 수립을 통해 출장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함. - 단순 결과 보고를 넘어 출장 성과가 실제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후 평가 체계 및 성과 지표를 구축할 것을 요구함. **□ 직장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하락에 따른 정원 조정 검토** ○ 고양시청 직장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감소 문제 및 대책 마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고양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지속적으로 하락(25년도 59.8%)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부모 급여 인상 육아휴직 활성화, 복직 시 구청 선호 현상 등 구조적 원인에 기인함을 확인함. - 현원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정원(82명)을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현실에 맞게 정원을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함 .
자 치 행 정 국 (인 적 자 원 과)	□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준수 여부 점검 ○ 5급 이상 정·현원 직렬 불일치 및 규정 준수 실태 지적 -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로부터 화정2동, 대덕동, 마두1동 등의 5급 이상 정·현원 직렬 불일치 사례의 시정조치를 언급하며, 현재 해당 사안이 시정되었는지 확인하고 향후 관리 실태를 점검함. - 인적자원과는 과거 지적 사항은 정기 인사를 통해 조치 완료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시행규칙상 직렬 (행정, 사회복지, 환경, 시설 등)이 아닌 공업 직렬이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 특정 부서(구청 환경녹지과, 삼송 1동장)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함. - 이에 대해 인적자원과장이 해당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질타하며, 구청 환경녹지과 및 삼송1동장의 직렬·직급 배치 적정성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보고할 것을 주문함. □ 인사 운영 지표 분석 및 조직 문화 개선 ○ 인사 운영 만족도 하락 및 청렴도 평가 관리 - 2024년 인사 운영 관련 직원 만족도가 2.88점으로 전년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2.99점) 대비 하락하였으며, 2년 연속 2점대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인사업무 관련 청렴도 평가가 실제 인사행정의 공정성 및 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하락 원인 분석과 개선책 마련을 주문함. ○ 상위 직급 여성 공무원 비율 불균형 및 구조적 문제 점검 - 9급(66%), 8급(64.9%) 등 하위직에서는 여성 비율이 높으나, 5급(30.3%), 4급(9.5%)으로 올라갈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직급별 성별 분포의 불균형 현상을 지적함. - 이러한 현상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점검을 요구하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승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리더십 교육 강화를 당부함. **□ 파견 공직자의 선정·근무·복귀·보상·성과 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와 제도적 보완,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 사례를 백서 등으로 제작·공유할 것을 요청하고, 복귀 시 성과·제안사항 제출을 제도화해 파견 제도의 효과성을 높일 것을 제안** **□ 빅데이터 및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체계 개선 요구** ○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위한 공직자 전문성 강화 주문 - 각종 정책 심의나 예산 심사 과정에서 타 지자체 사례나 관행, 막연한 기대효과에 의존하여 판단함에 따라 객관적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근거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시각차에 따른 찬반 갈등이 발생함을 지적함. - 고양연구원 등을 통해 확보된 양질의 빅데이터를 실무 부서에서 정밀하게 분석하고 정책에 대입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과 주관하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교육 훈련을 확대할 것을 주문함. - 단순 교양 수준의 교육을 넘어 스마트시티과(빅데이터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실무 중심의 AI 및 데이터 활용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들이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설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함. **□ 인사 행정의 공정성 제고 및 직원 만족도 하락 원인 분석 촉구** ○ 인사 청렴도 및 내부 고객 만족도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인사 분야) 및 시 자체 내부 고객 만족도 조사 점수가 2년 연속 하락(59.9점→52점, 2.99점→2.88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함. - 인사 만족도와 청렴도는 상호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긴밀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하락의 구체적인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지 못하고 있음을 질타함. - 같은 기간 근무성적평정 이의신청 건수가 증가(2건→5건→6건) 하고 있고, 이 중 상당수(6건 중 4건)가 인용되었다는 점은 부서장의 1차 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 노력을 주문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자 치 행 정 국 (주 민 자 치 과)	□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의 적정성 점검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추천 및 위촉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 지적 -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 아닌 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이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위에 대해 질의함. - 집행부는 반드시 소관 상임위 위원만 위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의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진행했다고 답변하였으나, 관례적으로 소관 상임위 위원 2명이 위촉되어 왔으며,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타 상임위 위원이 추천된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 이에 대해 해당 위원 위촉 당시 의회로 발송된 공문 및 추천 회신 내역을 확인하여 보고할 것을 주문하고, 향후 위원 위촉 시 소관 상임위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준수할 것을 당부함. - 이후, 해당 위원회의 위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교체함. □ 교육 사업 성과 관리 및 피드백 시스템 강화 ○ 인권 및 통일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 인권 및 통일 관련 교육 실적이 단순 횟수 중심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횟수 채우기가 아닌 연 단위의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교육 진행 시 사전·사후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교육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갖출 것을 주문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 점검 및 활성화 방안 논의** ○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모금 실적액(누적 약 3억 4천만 원)과 기금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2026년부터 시범 추진 예정인 기금 사업(어울림누리 노후 좌석 교체, 건강 취약계층 구강 유산균 지원 등)의 적정성을 확인함. ○ 기부자에게 세액공제(10만 원 전액, 초과분 16.5%)와 답례품(30%) 혜택이 주어지는 등 이점이 큼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 대비 모금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함. □ **주엽1동 커뮤니티센터 위탁 운영 구조의 적법성 및 사유화 방지 대책 촉구** ○ 커뮤니티센터 대표자 선임 및 운영 주체의 적정성 문제 제기 - 시와 위탁 협약을 맺은 당사자는 주민자치회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전임 회장(고문)을 센터 대표자로 지정하고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예산과 운영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기형적 구조를 지적함. - 위탁받은 기관(주민자치회)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내부 규정을 통해 특정인에게 운영권을 넘기는 방식은 사실상 불법적인 ‘재위탁’에 해당할 소지가 크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법률적 검토와 시정을 촉구함. - 특정 세력이나 인물이 공공시설을 장기간 점유·운영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접근을 차단하는 ‘시설 사유화’ 및 ‘카르텔 형성’ 우려를 제기하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동별 방문 민원 관리 체계화 정상화 촉구 ○ 동별 방문 건의사항 관리 부실 및 미해결 민원 누적 지적 - 시장의 동별 방문 시 접수된 민원이 3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아 주민이 의회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후 관리가 미흡함을 지적함. - 단순한 행사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약속한 사항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하는 시스템 부재를 지적함. ○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방치 및 전년도 지적사항 미이행 지적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 시 ‘적극적인 보수공사를 통해 시민에게 개방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도 소극적인 보수만 진행하며 여전히 미개방 상태인 점을 강력히 비판함 - 평화·인권·민주주의 교육의 장이라는 매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안전 진단 등을 이유로 개방을 차일피일 미루며 예산을 동결 편성하는 등 부서의 운영 의지가 부족함을 지적함. ○ 업무 실적 보고서의 허위·과장 기재 시정 요구 - 남북 교류 및 통일 교육 관련 예산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실적 보고서에 ’통일 의식확장’이라고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보고임을 지적함.
자 치 행 정 국 (민 원 여 권 과)	□ 시민 중심 민원 서비스 강화 및 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 점검 ○ 시정 모니터 운영의 실효성 확보 및 성과 관리 개선 - ‘시정 모니터’ 운영과 관련하여 단순 제안 건수는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많으나, 실제 시정에 반영되어 정책으로 채택된 비율이 미미한 점을 지적함. 2024년 한 해 동안 모니터 요원의 제안이 실제 시책으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함을 확인하고, 단순 건수 위주의 평가가 아닌 ‘정책 반영률’ 중심의 핵심성과지표(KPI) 도입을 주문함. ○ 복합 민원 처리 절차 개선 및 원스톱 시스템 강화 - 부서 간 소관 떠넘기기(핑퐁) 현상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지적하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외에도 민원 접수 단계에서 주무 부서를 명확히 지정하여 시민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의 강화를 촉구함. ○ 악성 민원 대응 및 담당 공무원 실질적 보호 조치 - 악성 민원 발생 시 단순 상담 연결을 넘어 소송 지원, 고발 조치 대행 등 실질적인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함. 컨트롤타워(소통협치담당관)가 별도로 있더라도, 실제 피해 당사자가 소속된 민원여권과 차원에서 법률 지원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챙길 것을 당부함. **□ 민원처리 착오 현황 관리 체계 부재 및 총괄 관리 시스템 구축 촉구** ○ 민원처리 착오 현황 자료 관리 부실 지적 -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민원처리 착오 현황 및 조치사항’이 ‘각 처리 부서에서 보유하는 자료’라는 사유로 공란으로 제출되어, 민원여권과 차원에서 현황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 민원여권과는 민원 사무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민원이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종결된다는 이유로 전체적인 착오 현황을 집계·관리하지 않는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임을 지적함. ○ 민원 총괄 부서로서의 역할 강화 및 데이터 기반 제도 개선 주문 - 민원처리 착오 유형을 분류하고 분석해야만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민 만족도 제고가 가능함을 강조함. - 단순히 민원을 배분하는 역할에 그치지 말고, 고양시 전체의 민원처리 착오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유형별 대응책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함.
자치행정국 (회계과)	□ **직원 단체보험 계약 방식 변경 적정성 및 예산 효율성 점검** ○ 단체보험 경쟁 입찰 유찰 및 수의계약 전환 사유 규명 - 2023년 경쟁 입찰로 진행되었던 직원 단체보험 계약(약 12억 9천만 원)이 2024년(약 16억 6천만 원)과 2025년(약 19억 4천만 원)에는 수의계약으로 전환되고 계약 금액이 증가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질의함. - 이에 대해 회계과는 국내 보험 시장의 과점 구조와 컨소시엄 입찰 관행, 그리고 암 진단비 상향 등 보장성 강화로 인한 높은 손해율(지급 보험금 증가) 때문에 보험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2회 유찰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했음을 소명함. - 수의계약 전환의 불가피성은 인지하나, 예산 대비 실제 지급된 보험금 규모와 보장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수의계약 정보공개시스템 입력 현황 점검하고 물품 구입뿐만 아니라 임대 방식의 수의계약도 포함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 해당 업무 담당자가 시스템에 100% 입력하고 있음을 확인** □ **부정당업자 제재 관리 철저 및 계약 행정의 신뢰도 제고**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적정성 확인 및 재발 방지 노력 주문 - 최근 2년간(2024~2025년) 발생한 4건의 부정당업자 제재(계약 포기, 계약 조건 위반 등)와 관련하여, 제재기간(2~6개월)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점검함. -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가 이후 입찰에 다시 참여하는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며, 전국적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시스템상 누락 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함. □ **결산 정보의 예산 편성 환류 시스템 실질화 촉구** ○ 업무 실적 보고서상 ‘재정 운영 성과 분석 및 환류’의 허구성 지적 - 회계과의 업무 실적 보고서에 ‘재정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예산 편성에 환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예산담당관실과의 구체적인 협업 시스템이나 회의체가 부재함을 지적함. - 예산 편성(예산담당관)과 집행 및 결산(회계과)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단절된 행정 시스템을 질타하며, 단순한 결산서 작성을 넘어 결산 결과가 차기 예산 편성에 실질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을 통한 공정성 확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특정 업체 편중 방지 및 관내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 현재 ‘수의계약 희망 제안 제도’에 더해, 인근 지자체(파주시 등)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의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을 제안함. - 특정 업체로의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고 다양한 관내 업체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함. 부서에서 정책 검토 예정에 대한 답변을 확인함.
자 치 행 정 국 (재 산 관 리 과)	□ **공공청사 건립 사업의 공정 관리 및 신뢰성 제고** ○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일정 지연에 따른 대책 점검 -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2025년 준공 목표에서 2026년, 2027년으로 계속 지연되더니 현재는 2028년 4월 준공으로 계획이 변경된 점을 지적함. - 잦은 준공 시기 번복은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거짓말을 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질타하며, 정확한 공정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비판함. - 이에 대해 재산관리과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지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재심의 등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이 늘어난 점을 해명하였으나, 타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일반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징수 실적 저조 원인을 지적하였으며 법적으로 결손 처분이 어려워 부과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건물 압류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확인** □ **행정안전부 주관 공유재산 총조사에 따른 고양시의 오류 자료 정비 실적 및 누락 필지 발굴 현황을 점검하고 무단 점유지 확인을 통한 세외수입 확대 및 미활용 행정재산의 적극적인 활용 계획 수립을 주문** □ **탄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 및 공기 준수 촉구** ○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한 착공 시기 순연 및 주민 불편 우려 - 당초 2024년 5월 설계 공모, 2025년 6월 착공, 2027년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부지 확보 후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설계 공모 운영위원회 구성 등 행정 절차와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인증 기간의 대폭 증가(3~5개월 → 9~10개월)로 인해 일정이 1년 이상 지연됨을 지적함 - 현재 임차 청사를 사용 중인 상황에서 예비군 동대 창설 문제 등 공간 부족에 따른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탄현 근린공원 2단계 준공 시점과 청사 건립 시기가 맞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과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음을 우려함. - 물리적인 행정 소요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변경된 일정(2026년 1월 설계 공모, 2027년 3월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 예상)만큼은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행정 신뢰를 회복할 것을 강력히 주문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고양시자원봉사센터	□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대책 마련 촉구 ○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미수납액 발생에 대한 우려 표명 - 2025년도 공유재산(시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액 (2억 8,300만 원) 대비 징수액(2억 3,800만 원) 간에 약 5천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징수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함. - 연말까지 분납 등을 통해 징수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나, 잔여 기간(3개월) 동안 전액 징수가 가능한지에 대해 철저한 징수 활동을 주문함. □ 자원봉사 활동 실비 지급 및 심사 방식 개선을 통한 참여 활성화 ○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현황 확인 및 격려 - 자원봉사자(거점센터 매니저 등)에게 지급되는 실비(4시간 기준 1만 5천 원)가 교통비와 식대 등 최소한의 경비 보전 차원임을 재확인하고, 과거 무보수였던 상황에서 실비 지급 제도가 정착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자원봉사 스토리텔링 대회 심사 방식의 공정성 제고 제안 - 자원봉사 스토리텔링 대회 심사 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비를 지급하는 기존 방식 대신, 현장 청중 평가단(오신 분들)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을 제안함. - 심사위원을 둘 경우 참가자가 사전 홍보나 인맥을 동원하는 등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중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심사비 등)을 절감할 것을 주문함. - 이에 대해 센터 측은 2025년도 대회부터 수당 지급을 없애고 청중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고 답변함. ○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 입시 제도 변화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의무 봉사 시간이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축소되면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저조해진 현상을 안타까워하며 우려를 표명함. - 재난 복구 현장 등에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청소년들이 봉사의 가치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센터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 자원봉사자들의 신뢰와 헌신에 대해 공감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하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함을 언급** **□ 수익성 행사의 자원봉사 지원 기준 정립 및 실비 확보 근거 마련(수익 사업을 겸하는 외부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무료 봉사 지원 지양)** ○ '손기정 평화 마라톤 대회'에 고양시 자원봉사센터가 145명의 봉사자를 파견하였으나, 해당 행사가 고액의 참가비와 후원금을 받는 수익성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으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실비 등)도 받지 못한 점을 지적함. ○ 단순히 자원봉사센터 간 네트워크나 협조 요청에 의해 고양시의 예산과 봉사자들의 노력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특히 영리 목적이 포함된 외부 행사의 경우 주최 측이 비용을 분담해야 함을 강조함 ○ 향후 유사한 수익성 대외 행사에 인력을 지원할 경우, 주최 측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지원금(운영비, 봉사자 실비 등)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규정과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일 산 서 구 청	**□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격려 및 조직문화 확산** ○ 민원 처리 과정의 적극적 소통 및 피드백 우수 사례 발굴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신속한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진행 상황을 중간 공유(피드백)하여 민원인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높인 사례를 언급함. - 우경희 팀장, 김동영 팀장, 이정임 팀장 등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며, 바쁜 업무 중에도 사진 전송 및 카카오톡 등을 통해 민원인과 소통한 점을 높이 평가함. - 구청장에게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와 향후 표창 기회 반영을 당부하며, 이러한 적극행정 사례가 조직 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주문함. **□ 일산시장 주변 주차 단속의 탄력적 운영 주문**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인 고충 해소를 위한 행정 지도 - 일산시장 내 공영주차장 문제 및 주변 주차난으로 인해 상인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나치게 경직된 주차 단속은 시장 방문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함. - 일산2동장과 구청장에게 시장 상인들의 생업과 직결된 문제임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주변 상황을 고려한 계도 위주의 탄력적인 주차 관리를 당부함. **□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격려 및 민원 안내 서비스 강화** ○ 시스템 한계를 극복한 적극 행정 사례 격려 - 산업위생과 김일호 과장과 안세원 농정팀장이 전산 시스템의 오류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을 끝까지 추적하여 해결한 사례를 언급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관행이나 시스템 탓을 하지 않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한 적극 행정을 높이 평가하며 격려함. ○ 무인민원발급기 장애 시 안내 체계 점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전산 장애 발생 시, 현장 무인민원발급기에 안내문 부착 등 즉각적인 조치가 미흡했음을 지적함. - 디지털 약자나 현장 방문 민원인을 위해 시스템 장애 시 신속하게 안내문을 비치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함. ○ 민원상담 인턴 운영의 효과성 확인 - 민원실 내 상담 인턴(일 2교대, 4시간 근무) 운영이 서식 작성 안내 등으로 시민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당부함. **□ 인구주택총조사 관리자 채용 방식의 형평성 문제 지적** ○ 총관리자 채용 시 경력 우대 관행 개선 요구 -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채용 시, 총관리자 직급에 경력자를 지나치게 우대하여 신규 진입 장벽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함. - 경력자 위주의 채용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일 수 있으며, 신규 지원자도 업무를 습득하여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함. - 도농복합지역인 일산서구의 특성상 조사원들의 가구 방문 시 안전 문제와 고충을 해결할 방안 마련을 촉구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혼인신고 기념 서비스 개선 및 청사 안전관리 강화** ○ 트렌드를 반영한 혼인신고 기념 서비스 도입 제안 - 현재 혼인신고 시 제공되는 ‘혼인 10계명 카드’ 외에, 젊은 세대의 선호도를 반영한 포토존 설치나 기념사진 촬영 등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함. ○ 반복되는 소방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시정 촉구 - 감사 결과 ‘소방안전관리 소홀(자체 소방계획 수립 미비, 훈련 미실시 등)’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질타함. - 관공서로서 화재 예방 및 시민 안전과 직결된 법적 의무사항(소방계획서 제출, 훈련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안전불감증임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함. □ **구청장 임기 내 실현하고자 하는 중점사업의 명확한 설정과 추진 의지를 요청하고 예산 확보 및 의회 설득 등 실질적 실행 방안 마련을 당부** □ **각 동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간담회 항목의 집행 횟수에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 □ **일산시장 노후화 개선안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한 연구도 확인할 것을 요청** □ **방치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정비 건의의 진행 상황 보고를 요청** □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공사 관련 주민 우려 해소 및 관리 감독 강화**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기반시설 공사(진출입로, 전력구) 진행 상황 점검 및 투명한 정보 공개 주문 -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큰마을교회에서 가구공단 사거리 방향 진출입로 개설 및 가감차로 공사로 인한 도로 점용, 가로수 제거 등이 발생하여 주민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함. - 초고압 전력 케이블 매설 공사의 굴착 깊이와 현재 진행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함을 강조함. - 공사를 위해 제거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재식재 방안), 가감차로 및 인도 설치 완료 시점 등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의회와 주민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주문함. **□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 행정 개선** ○ 상가 밀집 지역(탄현 2지구 등) 주차 단속의 탄력적 운영 촉구 - 탄현 2지구 및 대화동 먹자골목 등 지역 상권이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으며, 상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주차 문제임을 지적함. - 공영주차장 확충(타워형 건립 등)과 같은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점심·저녁 시간대 등 상권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에 주차 단속을 유예하거나 계도 위주로 운영하는 등 탄력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청함. **□ 일산시장 공영주차장 노후화 및 운영 제한에 따른 대책 마련** ○ 시설물 안전 조치 및 대체 주차 방안 강구 - 일산시장 내 철골 주차장이 2층 바닥 침하 등으로 인해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1층만 운영되고 상부층이 폐쇄되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함. -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경기도에 있어 보수 예산 확보 절차가 필요하더라도, 관리 주체인 서구청이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강조함. - 시설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주변 도로의 주차 허용 구간 확대 등 구체적인 대체 방안을 연구하고 실행할 것을 주문함.
일 산 동 구 청	□ **민원 행정 서비스 우수 공무원 격려** ○ 적극행정 및 신속한 민원 처리를 수행한 우수 직원 격려 - 지난 1년 동안 장기 소요 민원 등에 대하여 중간 피드백을 제공하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일산동구청 소관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함. - 최은석 팀장 외 8명의 구체적인 명단을 언급하며, 해당 직원들에 대한 구청장 차원의 격려와 칭찬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킬 것을 주문함. □ **통장 위촉 심사 기준의 합리성 제고** ○ 통장 선발 심사 시 봉사활동 실적 배점의 형평성 문제 지적 - 통장 후보자 심사 기준에서 봉사활동 실적 점수(15점)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함. - 생계 유지 등으로 인해 과거 봉사활동 실적을 쌓지 못했으나, 향후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기회를 박탈당하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봉사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통장직을 수행하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심사 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함. **□ 호수공원 내 공공 체육시설 관리 소홀** ○ 운동기구 노후화 및 위생 관리 상태 불량 지적 -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호수공원 내 운동기구가 여전히 녹슬고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어 있음을 사진 자료를 통해 지적함. - 호수공원은 일산동구의 대표적인 명소로 내·외국인 등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위생 상태가 불량하여 이용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음을 질타함. - 공원관리과 등 유관 부서와 협의하여 즉각적인 정비 및 청소 등 근본적인 환경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함. **□ 수의계약 관행 개선 및 통합 발주 시스템 검토** ○ 특정 업체 독점 방지 및 계약 투명성 제고 요구 -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1인 견적 수의계약 및 분할 발주(일명 쪼개기 계약) 문제와 관련하여, 단순히 계약 업체를 1개에서 2개로 늘리는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투명한 내부 선정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함. - 단순한 업체 변경을 넘어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관내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을 강조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행정 효율성과 관내 기업 상생을 고려한 통합 발주 추진 -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성을 위해 유사 용역에 대한 통합 발주를 검토하되, 영세한 관내 업체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균형점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 3개 구청의 동일 부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당부함. **□ 동 행정복지센터 소방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강력한 시정 요구** ○ 반복되는 소방안전관리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촉구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소방안전관리 소홀(소방훈련 미실시, 자위소방대 미편성, 계획서 미작성 등) 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강력히 질타함. - 동 행정복지센터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이므로 화재 대비 태세가 완벽해야 함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실질적인 개선과 법적 의무 이행을 촉구함. **□ 시민 맞춤형 특수 시책 및 부동산 건전화 노력 격려** ○ 제적등본 한자 독해 서비스 및 혼인신고 포토존 운영 호평 - 일산동구청만의 특수 시책인 ‘제적등본 한자 독해 지원 사업’과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추억 한 컷)’ 운영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호응을 얻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허위 매물 방치에 대한 모니터링(방치 매물 모니터링)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 전세 지킴이 운동’ 추진 등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격려함. **□ 지하철 3호선 백석·마두·정발산역 등에서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빈번해 특히 장애인·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불편이 크며, 고장 시 민원 접수·처리 주체 안내도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 **□ 관내 역세권 에스컬레이터 고장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하며, 관련 사항을 교통국 및 관계 기관에 공식 공문으로 전달해 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청** **□ 동장 및 통장협의회장과의 정기적 회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을 확인** **□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는 정발산동·백석1동 등에서의 각한 무단투기 문제를 지적하고, 자발적 계도 활동을 하는 동 단체의 권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동구청이 시범적으로 집중 관리와 개선책을 마련, 민관 협력의 단계별 대책을 수립해 타 동으로 확산할 것을 요청** **□ 인력운영비 예산의 과다 편성 및 불용액 발생 지적** ○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 주문 - 2023년도 1억 8,700만 원, 2024년도 1억 8,200만 원 등 인력운영비에서 매년 1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중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2023년도의 경우 편성액(5억 원) 대비 불용률이 약 55% 이상에 달하는 등 예산 추계의 부정확성을 질타함. - 예산 편성 시 관행적인 편성을 지양하고, 실제 소요에 대한 정확한 수요 파악을 통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함. **□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위생 행정 패러다임 전환 촉구** ○ 처벌 위주 단속에서 예방적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 요구 -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원마운트, 라페스타 등 관내 핵심 상권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함. -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이 연간 수백 건(23년 169건, 24년 223건)에 달하나, 단순 규정 미숙지나 억울한 사례(청소년 신분증 위조 등)가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함. - 사후 처벌과 과태료 부과 위주의 경직된 행정보다는, 찾아가는 위생 컨설팅 및 사전 계도 활동을 확대하여 상권을 보호하고 영세 상인을 구제하는 ‘예방 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역할 강화** ○ 시설물 관리 위주 행정에서 취약계층 발굴로의 균형 강조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간담회 건의사항이 주로 보도블록 교체, 배수로 정비 등 토목·시설 민원에 편중되어 있음을 분석함 - 고독사 위험군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실적은 데이터상으로 미흡해 보임을 지적하며, 단순 민원 해결을 넘어 소외된 이웃을 능동적으로 찾아내는 복지 행정을 강화할 것을 당부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덕 양 구	□ 구청장기 체육대회 종목 선정 방식 및 공모 절차 개선 ○ 특정 종목 편중 및 비공모 방식 운영에 대한 시정 요구 - 2023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청장기 체육대회 종목(테니스, 게이트볼, 축구 등)이 매년 고정되어 있고 비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으나, 금년도 운영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질타함. - 집행부는 가맹 단체의 수행 역량(조직, 자금 등) 부족을 이유로 기존 단체 위주의 비공모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는 타 종목 단체들이 해당 대회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함을 지적함. - 수행 역량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나, 사전에 기회를 차단하는 방식이 아닌 개방형 공모를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종목 단체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개선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함. □ 관행적 1인 견적 수의계약 및 분할 발주(쪼개기 계약) 개선 촉구 ○ 특정 업체 장기 독점 및 동일 날짜 분할 계약의 문제점 지적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토지·건축물·주택분), 주민세, 자동차세 고지서 제작 등 연례적·반복적 용역 사업이 특정 업체(A업체, B업체 등)와 10년 이상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고 있음을 질타함. - 특히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분 고지서 제작 등 성격이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날짜(12월 27일 등)에 별도의 건으로 분할 계약하여 수의계약 기준 금액(2천만원) 이하로 맞춘 정황이 뚜렷함을 지적하며, 이는 경쟁입찰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으로 비칠 우려가 있음을 강조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세무과 등 사업 부서와 계약 부서(자치행정과) 간의 칸막이 행정을 지적하며, 유사한 성격의 인쇄 및 고지서 발송 용역을 '통합 발주'하여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규 업체의 진입 장벽을 낮출 것을 강력히 주문함. **□ 대형 유통점 홍보 매체 활용의 실효성 제고** ○ 관내 대형 유통 인프라를 활용한 구정 홍보 강화 주문 - 덕양구 관내에 위치한 이케아, 스타필드 등 대형 유통점의 집객 효과를 고려할 때, 현재의 단순 지류 홍보물 비치 방식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함. - 해당 시설 내에 설치된 미디어 타워, 키오스크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소통 행정을 강화할 것을 당부함. **□ 과거 덕양구와 일산구의 예산 배분 및 발전 격차에 대해 언급하며, 덕양구 발전을 위한 예산 반영의 중요성을 강조** **□ 구청장 임기 내에 덕양구를 위해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 **□ 어린이박물관 인근 부지에 대규모 문화·복합시설(예: 박물관, 청소년센터 등) 조성을 제안하며, 국비·도비·시비 매칭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설명**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덕양구 주민들이 일산구에 비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
	□ **농지법이 2025년 1월 개정되어 농지 개량 행위 신고 기준(특히 성토 높이 등)이 변경된 점을 언급하며,**
	○ 덕양구가 농지법 개정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고 있는지 질의하였으며, 농지 관련 부서(구청 농지 담당, 농업기술센터 등)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불법 성토 등 농지 관리에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협조를 당부.
	□ **원당시장 주변 환경 정비 및 불법 투기 대책 마련**
	○ 원당시장 앞 원당대로변 및 세계로마트 인근 등 특정 구역에 평일 야간 및 주말마다 음식물 쓰레기와 포장재 등이 산더미처럼 적치되어 악취와 미관 저해를 유발하고 있음을 지적함.
	○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투기가 지속되는 것은 행정력(과태료 부과 등)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임을 꼬집으며,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선 강력한 행정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함.
	○ 주말 등 청소 공백 시간에 시민 왕래가 잦음에도 방치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시장 상인회 및 주변 상가와의 간담회를 통한 계도 활동과 주말 처리 방안 강구를 주문함.
	□ **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 소홀 및 주차장 유료화 문제**
	○ 성라체육공원 등 관내 공원 체육시설의 녹 발생 및 파손 상태가 심각하여 주 이용층인 어르신들의 안전이 우려됨을 지적하고, 정기적인 관리와 보수를 촉구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성사체육공원 내 주차장이 기존 무료 운영에서 유료화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현수막이 게시된 것과 관련하여,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해 덕양구청 소관일 경우 유료화 계획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 가로 청소 용역 계약시 과업량 반영 미비 지적 ○ 삼송, 덕은지구 등 신규 택지 개발로 인해 가로 청소 면적이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와 투입 인력은 예전 수준으로 동결되어 있어 현장 근로자들의 업무 과중이 심각함을 지적함. ○ 향후 용역 재계약 시, 늘어난 청소 구역과 과업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예산 증액과 인력 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자원순환과)와 협의할 것을 주문함. □ 예산집행 내역과 결산 자료의 불일치 및 회계처리 오류 지적 ○ 세부 사업 예산 오집행에 따른 결산 데이터의 신뢰성 저하 문제 - 2024년도 결산 기준 환경녹지과 소관 ‘무원마을 녹지대 산책로 개선공사’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착오로 인해 다른 세부 사업인 ‘녹지대 관리 예산’에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지적함. -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목을 잘못 적용하여 타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단순 실수를 넘어 사업 예산의 집행 내역과 결산 수치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단속 위주 행정의 개선** ○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전 예방 및 계도 활동 강화 주문 - 최근 3년간 덕양구 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2023년 317건, 2024년 209건)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청소년 주류 제공이나 위생 부주의 등 영업 정지 및 과태료 처분 사안임을 언급함. - 고양시 전역의 핵심 상권이 공실 증가 등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생계형 소상공인들에게 사후 처벌 위주의 단속 행정은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킴을 질타함. - 법과 원칙에 따른 처분은 필요하나, 영세 상인들이 법규를 인지하지 못해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계도와 교육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적극 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함. □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행정력 집중 및 성과 지표 개발** ○ 시설물 관리 위주의 동 행정을 복지 위기 가구 발굴 중심으로 전환 촉구 - 동별 순회 간담회 등의 민원이 주로 보도블록 교체, 배수로 정비, 제초 작업 등 시설 관리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실제 행정력이 필요한 곳은 제도권 밖의 복지 사각지대임을 강조함. - 고독사 등 극단적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위기 가구 발굴 실적이나 사각지대 해소 노력 등 정성적 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하고, 이를 독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관리공사	□ **대형 공연 행사 지원 직원에 대한 격려 및 표창 확대** ○ 대형 공연 현장 근무 직원에 대한 사기 진작 방안 마련 - 고양종합운동장 대형 공연 개최 시, 교통 통제 및 안전 관리 등 현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노고가 많으나 성과가 고위직에게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실무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격려하고, 연말 표창 추천 시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을 주문함. □ **체육시설(수영장) 강습 등록 방식 개선 검토** ○ 장기 이용 회원 및 대기자 적체 해소 방안 강구 - 타 지자체(국립강릉원주대 체육진흥원 등)의 경우, 6개월 단위 수료제 등을 도입하여 신규 회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재등록 우선 방식으로 인해 신규 회원의 진입 장벽이 높은바, 일정 기간 후 전체 재추첨(리셋)을 통해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이 동등하게 경쟁하는 방식 등 공평한 이용 기회 보장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 □ **현업직 정년 연장 요구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치** ○ 노사 간 소통 강화 및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 - 현업직 직원의 정년 연장(60세→61세) 요구와 관련하여 시청 앞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바,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을 당부함. - 작년 감사 시 지적되었던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문제에 대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안이 종결되는 대로 결과를 보고할 것을 주문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중산체육공원 부설주차장 정기권 운영 방식 개선** ○ 지역 소상공인 주차 여건을 고려한 운영 방안 마련 - 중산체육공원 주차장 정기권 운영 변경(6개월 제한 등) 예고로 인해 인근 영세 소상공인들의 우려와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근본적 문제 해결과 병행하여, 제도 시행 전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한 세밀한 검토와 현명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고양종합운동장 대형 공연 유치에 따른 주민 소음·교통 대책 강화** ○ 주거 밀집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 고양종합운동장은 잠실 등 타 대형 공연장과 달리 아파트 단지 및 학교 등 주거·교육 시설과 인접해 있어 소음 및 교통 문제에 매우 취약한 입지 조건임을 지적함. - 대형 공연 유치 시 경제적 파급 효과는 긍정적이나, 소음 등 주민 피해 발생 후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하거나 단순히 현수막을 게시하는 소극적 홍보에 그친 점을 질타함. - 공연 기획사와의 협의를 넘어 공사 및 시 차원에서 아파트 단지 안내 방송, 반상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양해를 구하는 등 사전 동의 및 홍보 절차를 강화할 것을 주문함. □ **체육시설 안전사고(수영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조치 개선** ○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 처리 지양 및 피해자 정서적 케어 강화 - 지난 3월 발생한 고양체육관 수영장 어린이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하여, 공사가 보험 처리 등 행정적·법적 절차에만 치중하고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도의적 사과나 정서적 위로가 부족했음을 지적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사고 발생 후 시설 보수(실리콘 처리 등)가 보험사 현장 조사 등을 이유로 3개월 가까이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을 촉구함. - 법적 책임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따뜻한 공기업'으로서의 자세를 갖출 것을 강력히 주문함. **□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단순 관리에서 나아가 GH처럼 적극적인 개발사업과 자산 개발을 통해 시 재정에 기여하는 수익 창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구** **□ 대형 공연장의 경우 수입 증대와 지역경제 효과는 긍정적으로 보되, 관람객 안전·시설 보호·복구비 책임 등을 매뉴얼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 운영·안전 관리를 개선할 것을 주문** **□ 실내체육관 및 부대시설을 활용한 소규모 공연·행사 유치, 주차장 등 민간개발과 스포츠타운 조성 등으로 장기적 수익 기반과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 **□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집행부·공사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고양시를 문화·스포츠 콘텐츠 중심지로 만드는 장기 비전과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 **□ 어울림누리 체육관 주말(토요일) 대관 확대 및 회원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 어울림누리 체육관은 중소형 행사 및 생활체육 행사에 적합하여 시민들의 대관 수요가 높으나, 토요일 정규 강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 대관이 제한적인 상황임.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토요일 대관 시 기존 회원들의 환불 처리 등 행정적 어려움이 있음을 인지하나, 공공시설의 공유 활성화를 위해 3~4개월 전 사전 공지를 통해 회원들이 미리 휴강을 인지하고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등 행정 편의와 대관 확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을 주문함. **□ 성사체육공원(고양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 ○ 성사체육공원 내 주차장 유료화 추진 과정에서 공사 소관인 국민체육센터 이용자는 주차비 감면이 적용되나, 동일 부지 내 시립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이용자에 대한 감면 협의가 미진하여 형평성 논란이 우려됨. ○ 동일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용 시설에 따라 주차요금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불공정한 행정을 지적하며, 유료화 시행 전 관련 부서(공원관리과 등) 및 위탁 단체와 협의하여 모든 시설 이용자에게 공평한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고양종합운동장 잔디 관리 및 유지보수 체계의 근본적 개선** ○ 대형 공연 유치에 따른 잔디 훼손 복구 방식의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 -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대형 공연이 잇따라 개최되면서 수익 창출에는 기여했으나, 공연 후 기획사가 수행하는 부분적인 잔디 보수(일명 ‘땜빵’식 보수)로 인해 구장의 잔디 상태가 균일하지 못하고 지반이 딱딱해지는 등 축구 전용 구장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기획사에게 원상복구를 맡기는 현행 방식 대신, 계약 시 규격화된 복구 비용을 징수하여 별도의 ‘잔디 보수 기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활용해 적절한 시기에 공사가 주도적으로 전면 교체 등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함. - 향후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완료(2032년 예정) 이후에는 다시 축구 전용 구장으로서의 기능이 중요해지므로, 당장의 편의를 위해 인조 잔디로 교체하는 것은 A매치 유치 불가능 등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며, 천연 잔디 품질 유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함. **□ 공사 운영 사업장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수지율 개선** ○ 만성 적자 사업장에 대한 경영 합리화 방안 강구 - 공사가 관리하는 20여 개 사업장 중 종량제 봉투, 공영주차장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사업장(체육시설 등)이 수입 대비 지출이 과다하여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함. - 공공성 유지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매년 반복되는 막대한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수익 증대 및 지출 최소화 등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자구책 마련을 주문함. **□ 탄현 제1공영주차장(노상)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민원 대책** ○ 무인 유료화 전환 시 행정서비스 이용객 감면 혜택 유지 - 탄현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노상주차장의 무인 유료화 전환 시, 기존에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인에게 제공되던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이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함.

관련 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관리 철저 ○ 반복 계약 기간제 근로자의 법적 지위 검토 요망 - 기간제 근로자를 1년 단위로 계약 종료 후 재채용하는 관행과 관련하여, 55세 미만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등 법적 쟁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함. - 기간제 근로자의 연령별, 근무 기간별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법적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법한 인력 운영을 할 것을 주문함.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종합의견

□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 지난 11월 14일(금)부터 11월 21일(금)까지 8일간 3개 담당관, 1실, 2개 국, 3개 구청 및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10개 위원회 선정 기관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등 3개 본회의 승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 기간 동안 총 87명의 증인이 출석하여 답변함.

□ 주요 감사 방향 및 성과로는

○ 집행부가 추진한 정책의 실효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공공데이터 관리 수준, 산하기관 운영의 투명성 등 행정 전반을 시민의 관점에서 면밀히 점검하였음.

○ 위원들은 비판을 위한 비판을 지양하고, 시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감사’를 실현

하고자 노력함.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일회성 답변에 그치지 않도록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였음.

○ 아울러, 고양시 도시 브랜딩에 기여한 대형 공연 유치 성과와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약 등 우수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일선 현장에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특화서비스 제공과 민원 해결에 헌신한 공직자들을 격려하며 조직 사기를 진작함.

□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211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 사항 등을 채택하였음.**

○ 감사 결과, 다수 부서가 주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며 행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이 확인되었으나, 법령 및 조례 준수 미흡, 보조금 정산 관리 부족, 공용차량 운영 관리 부실, 홈페이지·공공데이터 현행화 소홀, 산하기관 운영 전반의 관리상 미비 등 개선이 시급한 과제가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감사위원들은, 책임 있는 행정 체계 확립과 시민 신뢰 회복을 촉구하며, 공공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또한, 시의 구청 및 동 감사 시 반복되는 동일 유형의 지적 사항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체계 강화와 교육 확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하였음.

□ **향후 과제로**

○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은, 고양특례시 행정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 특히 기본 절차 준수, 회계·자료 관리의 투명성 강화, 산하기관 운영의 책임성 제고, 시민과의 소통 확대, 공공데이터 품질 향상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

○ 집행부는 본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신속히 시정하고, 반복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각 부서는 정책 수립과 집행의 전 과정에서 시민의 눈높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임.

나. 기관(부서)별 현황

부서별 \ 구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합 계		211	
소통협치담당관		16	
감사관		8	
언론홍보담당관		12	
기획조정실	소 계	31	
	기획정책관	12	
	예산담당관	11	
	법무담당관	2	
	정보통신담당관	6	
자치행정국	소 계	35	
	행정지원과	3	
	인적자원과	6	
	주민자치과	13	
	민원여권과	4	
	회계과	4	
	재산관리과	5	
교육문화국	소 계	24	
	평생교육과	7	
	체육정책과	17	
구청	소 계	39	
	3개 구청 공통	0	
	덕양구청	12	
	일산동구청	12	
	일산서구청	15	
고양도시관리공사		16	
고양연구원		8	
고양시체육회		15	
고양시자원봉사센터		7	

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211건)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소통협치담당관	□ 「고양시에 바란다」 민원 처리 방식 개선 및 장기 민원 관리 강화 ○ (지적사항) 타 기관 소관 민원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불수용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용 곤란' 처리를 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태도임. 또한, 접수된 지 수개월이 지난 민원(정발산동 횡단보도 등)의 진행 상황조차 부서장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원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것임 ○ (요구사항) 타 기관 협조가 필요한 민원의 경우 단순히 종결 처리하지 말고 최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확보하여 민원인에게 안내할 것.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장기 민원 전반에 대해 진행 상황을 재점검하고, 담당 부서장이 현황을 상시 숙지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정비할 것. □ 민원 소통 창구의 효율적 재구조화 및 기능 명확화 ○ (지적사항) '직소민원', '현장민원25', '고양시에 바란다', '국민신문고' 등 민원 창구가 난립하여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저해하고 행정력을 분산시키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민원과 제안의 경계가 모호하여 창구별 성격이 불분명함. ○ (요구사항)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민원 창구를 과감히 통합하거나, 각 창구별 목적(단순 민원, 정책 제안 등)을 명확히 재정립하여 시민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장기 검토 민원에 대한 명확한 처리 방향 안내 ○ (지적사항) 실질적으로 해결이 어렵거나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사안임에도 ‘장기 검토’라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여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기대와 피로감을 유발하고 있음. ○ (요구사항) 부서에서 해결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되,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장기 검토’로 유보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여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것. □ “협치” 관련 사업 편성할 것 ○ (지적사항) 협치관련 사업을 반영할 것. ○ (요구사항) 소통협치담당관은 부서명으로는 ‘소통’과 ‘협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상 ‘협치’ 관련 사업은 전무함. □ 소통 및 집단민원 대응 공간 확보 필요 ○ 고양시청 내 소통 및 집단민원 대응을 위한 공간이 부족함을 지적. ○ 경기도 내 우수사례 견학 및 공간 확보를 통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 필요성 제안. □ 원스톱 해결 시스템 구축 촉구 ○ 예산과 사업 부서가 분리되어 있어 민원인이 부서를 오가며 지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행정 불신과 분노가 가중되고 있음.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식사동 체육시설(볼링장, 수영장)의 기부채납 미비로 인한 장기 방치, 고양동 소각장 반대 민원 등 주요 갈등 사안들이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로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 주요 갈등 사안 발생 시 소통협치담당관 주재 하에 관련 예산·사업 부서 실무자가 즉시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대안을 도출하는 ‘원스톱 민원 해결 시스템’을 제안. **□ 갈등 해결 우수 사례집 제작 및 공유 요청** ○ 민원 및 갈등 해결을 위한 사례집 제작 및 공유 필요성 제안. ○ 궁도장 이전 합의 등 고양시의 실제 갈등 해결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구체적인 과정과 노하우를 담은 ‘우수 사례집’을 제작하고 전 직원에게 공유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할 것. **□ ‘고양시에 바란다’ 민원 데이터 정합성 확보 및 관리 철저** ○ ‘고양시에 바란다’와 ‘국민신문고’의 데이터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어 민원 현황 파악에 혼선이 있음. ○ ‘고양시에 바란다’와 ‘국민신문고’의 민원 연동 현황을 재점검하여 데이터 불일치 원인을 규명하고, 정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 **□ 동장 소통 창구 운영 평가 시스템 강화** ○ 현장 민원 해결을 위한 동장들의 참여도가 제각각 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나 제재 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현재의 ‘격려’ 위주 운영은 한계가 있음.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동장들의 현장 민원 처리 적극성을 동 평가 지표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우수 동에 대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동에 대한 페널티 부여 등 구체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당부. **□ 민원 처리 성과 분석 및 대시민 홍보 강화** ○ 1,4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적극행정 상을 수상했으나, 구체적인 해결 사례나 성과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음. ○ 연간 또는 반기별로 민원 처리 현황과 주요 해결 우수 사례를 분석하여 보도자료 배포, 기사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것. **□ 「시장과의 대화의 날」 운영 확대 및 적극적인 민원 수용** ○ (지적사항) 시장과의 면담은 시민들에게 있어 최후의 소통 창구이자 간절한 요구임에도, 행정 편의적인 사전 선별로 인해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음. ○ (요구사항) 단순한 효율성 검토를 넘어, 해결이 어렵거나 민감한 사안이라도 시장이 직접 경청할 수 있도록 면담 횟수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장기 미해결 민원(식사체육공원 등)에 대한 적극적 해결 방안 모색** ○ (지적사항) 식사체육공원과 같이 시설이 준공되었음에도 행정적·법적 절차 지연으로 인해 주민들이 장기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함.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요구사항) 소통협치담당관은 민원 접수 창구 역할에 그치지 말고, 식사체육공원 개방 등 장기 지연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와 주도적으로 협의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 갈등 유발 예상 시설에 대한 선제적 주민 소통 절차 매뉴얼화** ○ (지적사항) 행정기관이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사후에 더 큰 사회적 비용과 주민 불신을 초래함. 특히 데이터센터와 같이 타 지자체에서도 분쟁이 빈번한 사안에 대해 선제적 소통 절차 없이 인허가를 진행한 것은 소극적 행정임. ○ (요구사항) 연구용역 및 갈등 관리 매뉴얼에 반복적인 집단민원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구체화할 것. 법적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갈등이 예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인허가 결정 이전에 상급 결재를 득하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과 매뉴얼을 정비할 것. **□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홍보 예산, 직소민원 정례화) 이행 및 보고서 정정** ○ (지적사항) 의회의 시정 요구사항(홍보 예산 편성, 직소민원 정례화)을 부서 자의적 판단으로 불이행하였으며, 결과보고서에 전년도 실적을 기재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성실함. ○ (요구사항) 공공갈등 관리체계 홍보를 위한 2026년도 예산 편성 계획을 수립하고, 직소민원 정례화 계획(월별 운영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보고할 것. 또한, 오류가 있는 2024년도 행감 처리결과 보고서를 즉시 수정하여 금번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감 사 관	□ **특이민원 발생 시 조례에 따른 보고 체계 확립** ○ (지적사항) 「고양시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시장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서장 판단 하에 전결 처리하거나 구두 보고하는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임. ○ (요구사항) 향후 특이민원 발생 시 조례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서면 보고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자의적인 조례 해석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할 것. □ **민원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부서 간 협업 강화** ○ (지적사항) 다양한 민원 창구(국민신문고, 현장민원25, 동 방문 민원 등)가 존재하나 데이터가 통합 관리되지 않아 민원 분석 및 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요구사항) 각기 다른 채널로 접수되는 민원 데이터를 통합·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동 방문 민원 등 타 부서 소관 민원 데이터도 소통협치담당관실에서 통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추진할 것. □ **고양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특정감사 실시 및 조직 정상화 방안 마련** ○ (지적사항) 감사관실의 정기 감사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체육회 내부의 심각한 갈등(고소·고발)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 총체적 난국이 지속되고 있어 기존 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 (요구사항) 고양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해 과거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를 포함한 고강도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아울러 내부 갈등 해소와 조직 쇄신을 위한 구체적인 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중 문책할 것. □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따른 직원 보호 및 수사기관 협의 요청** ○ 최근 3년간 통보된 공무원 범죄 중 약 83%가 불송치되는 등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직원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부서 차원의 보호 대책 유무를 질의. ○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각하·기각이 명백한 사안은 신속히 종결하여 직원의 심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 □ **산하기관 직원 범죄 사실 통보 누락에 따른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 요구** ○ 시 공무원과 달리 산하기관 직원은 수사 개시 사실이 기관에 자동 통보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있어, 비위 혐의자가 승진하는 등 인사 검증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을 지적. ○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여 성실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산하기관 감사 및 인사 시스템에 반영할 것을 요청. □ **감사 처분 요구사항(재정 환수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인수인계 철저 요청** ○ 장애인복지과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부적정 지급 건(약 7,200만원 환수)과 같이 시일이 소요되는 사안에 대해, 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끝까지 환수할 것을 주문. ○ 감사 지적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부서에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독려하는 관리 체계 유지를 당부.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장기 미조치 사안(농지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 행정조치 강화** ○ 일산동구 산업위생과의 농지 불법행위 건과 관련, 6년 전 고발 조치만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실질적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직무 태만 소지를 지적. ○ 단순 고발에 그치지 않고 원상복구 등 행정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법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 □ **자체감사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지적사항) 초과근무 부정 수령, 출장 여비 부당 수령 등 동일한 비위 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집행부는 신규 직원의 업무 미숙 등으로 책임을 돌리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 (요구사항) 감사 지적 이후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추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나 인센티브 배제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및 불합리한 관행 근절** ○ (지적사항) 외부 및 내부 청렴도가 하락 추세임에도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예산이 수반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부족하며, '떡 돌리기', '간부 모시기' 등 구태의연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 (요구사항) 청렴도 하락 원인을 유형별로 정밀 분석하고, 부서장 책임 하에 불합리한 관행을 즉각 근절하도록 공문 발송 및 교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언 론 홍 보 담 당 관	□ **공문서 직인 무단 사용 및 위법한 규칙 개정 의혹 감사 실시** ○ (지적사항) 정상적인 기안 및 결재 절차 없이 직인이 날인된 문서가 외부로 발송된 사례와 조례에 반하는 시행규칙 개정 의혹 등 중대한 행정 절차 위반 사안이 발생함. ○ (요구사항) 해당 사안(행정지원과 직인 사용 건 등)에 대해 즉시 감사를 착수하여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것. □ **행정사무감사 답변의 신뢰성 확보 및 행정광고비 집행 기준 명확화** ○ (지적사항) 행정광고비 집행 기준 유무에 대해 전년도와 금년도 감사 답변이 정반대로 이루어져 행정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이는 의회의 감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 (요구사항) 행정광고비 집행 기준이 실제로 15~20년간 존재했다면 그 기준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의회에 소명하고, 향후 감사장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답변을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함. □ **예산 집행 자료의 정확한 작성 및 제출** ○ (지적사항) 물품 구매 내역 제출 시 조달 수수료 포함 여부를 명기하지 않거나 금액을 오기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인에 혼선을 초래함. ○ (요구사항) 향후 예산 결산 및 행정감사 자료 제출 시, 계약 금액과 지출 금액의 세부 내역(수수료 포함 여부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G버스 TV 등 광고 매체의 시의성 확보 및 콘텐츠 탄력 운용 ○ (지적사항) 행사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행사 광고가 G버스 TV 등에 지속 송출되는 것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잘못된 정보 제공 행위이며, 이는 시정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됨. ○ (요구사항) 광고 계약 기간 종료 후 서비스 차원에서 추가 송출이 이루어질 경우, 종료된 행사 영상이 아닌 고양시 브랜드 광고나 상시 정책 홍보 영상으로 즉시 교체 송출될 수 있도록 매체사와의 협의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할 것. □ 시정소식지 ‘맛집 코너’의 객관적 선정 기준 데이터화 ○ (지적사항) 시정소식지의 맛집 소개 코너가 시민들의 관심도는 높으나, 선정 기준이 모호할 경우 특정 업체 홍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으며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음. ○ (요구사항) 향후 해당 코너 재개 시, 포털 사이트의 검색량, 지도 방문자 리뷰 수, 객관적 데이터 지표 등을 활용한 명확한 선정 기준을 수립하여 공정성 시비를 차단할 것. □ 의회·집행부 홍보 예산의 동반 현실화 및 생산적 예산 협력 체계 구축 제안 ○ 타 특례시 대비 최하위 수준인 고양시 홍보 예산의 현실을 지적. ○ 의회 홍보 예산 삭감에 따른 의정 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예산 부서에 의회 홍보비 증액을 적극 요청할 것을 주문. ○ 집행부와 의회 홍보 예산의 동반 현실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소모적 삭감이 아닌 생산적 예산 협력 체계(선순환 구조) 구축을 제안.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소셜기자단 선발 기준 강화 및 우수 자원 연계 방안 마련** ○ 단순 거주 요건 외에 콘텐츠 제작 능력 등 객관적인 선발 기준을 강화하고, 역량이 검증된 청년 자원과 연계하여 인력풀을 고도화할 것. □ **시청 누리집 ‘보도자료’ 게시판 메뉴 구조 개편** ○ 정보공개 메뉴 내 ‘보도자료’ 메뉴 접근 시 ‘고양포커스’와 혼재되어 이용자 혼란을 주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 보도자료 원문에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메뉴 구조를 직관적으로 정비할 것. □ **부서별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지원 확대** ○ 언론홍보담당관 차원에서 홍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우수 홍보 사례를 적극 발굴·공유하여 조직 전반의 홍보 마인드를 제고할 것. □ **시 누리집(홈페이지) 메뉴 접근성 개선 및 정확한 정보 관리** ○ (지적사항) ‘보도자료’ 메뉴 클릭 시 엉뚱한 페이지 (고양포커스)가 연결되어 시민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인구 통계 등 주요 지표에 대한 단체장의 이해 부족이 드러나 행정 신뢰도가 저하됨. 또한 위원회 명칭 불일치로 정보 검색이 어려움. ○ (요구사항) 누리집 메뉴 구조를 직관적으로 개편하여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위원회 명칭 등 게시물 분류를 통일할 것. 또한 주요 통계 지표에 대해 단체장에게 정확히 보고하여 오발언을 방지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행정광고비 집행의 공정성 확립** ○ (지적사항)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언론사가 행정광고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등 편향적 집행 의혹이 있음. ○ (요구사항) 단체장의 주관적 선호가 아닌, 수립된 객관적 기준과 원칙에 의거하여 행정광고비를 공정하게 집행할 것. □ **관내 영상 제작 기업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지적사항) 방송영상특화도시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시 홍보영상 제작의 상당수가 관외(서울) 업체에 편중되어 있음. ○ (요구사항) 관내 우수 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관내 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가산점 부여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것. □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의 철저한 검증** ○ (지적사항)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명백한 오타(기준 → 채권 등)가 발견되었으며, 타 부서(법무담당관) 자료를 검증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임. ○ (요구사항) 의회 제출 자료는 부서의 얼굴임을 인지하고, 타 부서 협조 자료라 하더라도 반드시 소관 부서의 책임 하에 철저히 검증 및 오탈자를 수정한 후 제출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기 획 조 정 실 (기 획 정 책 관)	□ **주요 정책 변경 사항에 대한 의회 사전 소통 강화** ○ (지적사항)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등 의회의 심사권과 직결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요 정책 변경 시, 소관 상임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사전 설명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함. 이는 집행부와 의회 간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임. ○ (요구사항) 향후 주요 지침 변경, 조례 관련 쟁점 사항 등 중요 현안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확립할 것. □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 철저 및 성실 답변 이행** ○ (지적사항) 당연히 예상되는 쟁점 사항(조례와 시행규칙/지침의 상충 문제)에 대해 담당 부서장의 준비가 부족하여 원활한 감사가 저해됨. ○ (요구사항)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쟁점 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논리적 근거를 철저히 준비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 **저출생 대응 정책(청년둥지론)의 실효성 제고** ○ 수혜 대상이 극소수인 청년둥지론의 소득 기준 등 지원 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실질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이 되도록 할 것. □ **누릴고양 이용 편의 개선 및 시민 제안의 적극적 시정 반영** ○ 누릴고양 홈페이지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채택된 시민 제안이 사장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시민평가단 구성의 대표성 확보 및 통계 관리 철저** ○ 시민평가단 구성 시 특정 연령대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감사 자료상 과거 데이터의 불균형이 그대로 노출되어 평가의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됨. ○ 시민평가단의 의견이 실제 공약사업 계획이나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구체적 사례 제시를 요청함. ○ 향후 시민평가단 모집 시 연령, 지역, 성별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고, 미달되는 계층이 발생할 경우 보충 모집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 □ **고가도로 및 고속도로 하부 공간 활용 중장기 계획 수립** ○ (지적사항) 2024년 행감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교량 하부 공간에 대한 전수조사 외에 실질적인 중장기 활용 계획이나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음. ○ (요구사항) 단순 자재 창고 활용을 지양하고, '서울-문산 고속도로' 및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하부 등 대규모 가용 부지에 대해 주민 친화적 문화·체육 시설(커뮤니티 센터, 실내 체육시설 등)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 **관계 기관 협의 및 외부 재원 확보 방안 강구** ○ (지적사항) 하부 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도로 관리 주체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함. ○ (요구사항) 서울-문산 고속도로 주식회사 등 관련 기관과 즉시 협의를 개시하여 관리권 이양 또는 사용 승인 절차를 이행할 것. 아울러, 예산을 시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특별교부세, 도비 보조금 등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하부 공간 불법 점유물 정비 및 환경 개선** ○ (지적사항) 시청 인근 등 고가 하부 공간이 불법 주차와 불법 자재 적치 등으로 인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요구사항) 관내 고가 하부 공간의 불법 점유 실태를 재점검하고, 불법 주차 및 무단 적치물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을 개선할 것. □ **민간위탁 조례 및 시행규칙의 명확한 해석과 집행 기준 확립** ○ (지적사항)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기를 둘러싸고 조례 해석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어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요구사항) 위탁 동의안 제출 시점을 '위탁 전(모집 공고 전)'으로 명확히 하고, 의회의 역할(위탁 여부 결정)과 집행부의 역할(수탁기관 선정)을 분명히 분리하여 집행할 것. 아울러 선정 과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 □ **조례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규칙 재개정 및 위법 행정 시정** ○ (지적사항) 의회와 협의한 입법 취지(심사 결과에 대한 동의)를 무시하고, 시행규칙을 통해 동의 시점을 '모집 공고 이전'으로 앞당겨 의회의 심사권을 무력화함. ○ (요구사항) 의회의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의 본래 목적에 맞게 시행규칙을 즉시 재개정할 것. 아울러, 상위 조례의 위임 없이 제정된 위탁기간 연장 조항(6개월+3개월)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재검토하고 시정 조치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임의적 지침(공문)에 의한 조례 효력 정지 행위 엄중 경고 및 감사 실시** ○ (지적사항) 조례 부칙에 명시된 시행일과 유예기간을 무시하고, 내부 공문을 통해 시행 적용 시기를 임의로 연장한 것은 의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임. ○ (요구사항) 공문(지침)으로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킨 사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 **의회 기망 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 및 고발 조치 검토** ○ (지적사항) 조례 심사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편의를 위해 시행규칙을 정반대로 제정한 것은 의회를 기망한 행위임. ○ (요구사항) 당시 조례 심사 및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라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의회 기망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및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 위법성이 명백할 경우 고발 조치를 검토할 것.
기 획 조 정 실 **(예 산 담 당 관)**	□ **보조금 성과평가 오류 시정 및 자료 검증 체계 강화** ○ (지적사항) 고양시체육회 보조금 성과평가 과정에서 보조금 부정 사용 및 정산 보고 지연 사실이 평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아(감점 누락), 부실 운영 단체에 예산이 부적절하게 배정될 우려가 있으며 평가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됨. ○ (요구사항) - 지적된 체육회 보조금 성과평가 오류(부정 사용 미반영, 정산 지연 만점 처리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면 재조사하여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향후 고양연구원 등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성과평가를 진행할 때, 부서에서 제공하는 기초 자료의 정확성을 예산담당관 차원에서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 보조금 부정 사용이나 정산 지연 등 귀책사유가 확인된 단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 등 페널티를 엄격히 적용하여 재정 규율을 확립할 것. **□ 공공운영 보험 예산 편성 기준 개선 및 성과 평가 강화** ○ (지적사항) 자전거 보험, 시립합창단 상해보험 등 공공 보험 예산 편성 시, 단순히 전년도 예산액이나 표면적인 불용액만을 기준으로 삼아 보험료 인상 대비 지급률 하락, 만성적인 과다 편성(집행률 1%대) 등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함. ○ (요구사항) 향후 보험 관련 예산 편성 시 단순 집행률 확인을 넘어 보험의 보장 조건, 지급률, 지급 건수, 보험료 인상 내역 및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할 것. 이를 통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 **□ 예산 요구 부서 제출 자료에 대한 사실 검증 절차 확립** ○ (지적사항) 담당 부서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제출한 설명 (예: 지급 조건 완화 등)이 실제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음에도 예산 부서 차원의 검증 없이 예산이 반영됨. ○ (요구사항) 각 부서가 제출한 예산 요구 설명서의 내용(특히 보장 조건 변경 등)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철저히 교차 검증하고, 불일치하거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및 삭감 조치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만성적 불용 및 과다 편성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조치 의무화** ○ (지적사항) 4년 연속 99% 이상의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 관행적으로 동일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 효율성을 저해함. ○ (요구사항) 평가 기준과 검증 절차를 통해 불합리하거나 과다 편성된 것으로 확인된 사업, 특히 다년도 연속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의무적으로 삭감하거나 강력한 보완 조치를 취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예산 집행 관련** ○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점수가 낮은 이유와 평가 결과의 분석 및 활용 부족을 지적.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와 미흡한 점을 파악하고, 예산 반영 및 개선에 활용할 것을 요청. ○ 정기·수시감사 실시 여부와 감사 결과의 예산 집행 연계 필요성을 강조. □ **예산 편성 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및 수요 예측 자료 활용 의무화 검토** ○ (지적사항)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이나 수요 예측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경향이 있어 재정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요구사항) 향후 예산 편성 운영기준 수립 시,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이나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 또는 구체적인 수요 예측 데이터를 예산 요구의 참고 자료(증빙 서류)로 제출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심의 근거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국도비 보조금 집행 관리 및 예산 환류 시스템 구축** ○ (지적사항) 예산담당관이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 편성만 관리하고 집행 및 불용액을 관리하지 않아, 사업 성과가 차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등 예산 운영의 환류 체계가 작동하지 않음. ○ (요구사항) 국도비 보조금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불용액)까지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 집행 결과와 성과 평가 내용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객관적인 기준(감액, 증액 등)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환류 시스템을 구축할 것. □ **조례상 의무 지출 예산 확보 및 부서 지도 감독 강화** ○ (지적사항)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등 조례에 재원 확보가 의무화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부서의 미요구를 핑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도비 확보에 실패하고 조례를 위반함. ○ (요구사항) 조례에 명시된 강행규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주도적으로 사업 부서에 예산 요구를 독려하여 국도비를 확보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청년기본소득 미편성의 위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보고할 것. □ **시정질문 후속 조치 이행 및 주민참여예산 운영 서식 개선** ○ (지적사항) 시정질문에서 약속한 자료 제출이 부서의 자의적인 기한 해석(3개월)으로 지연 되었으며, 주민참여예산 서식이 행안부 기준과 상이함. ○ (요구사항) 시정질문 관련 미제출 자료 (주민참여예산 질적 성장 지표 등)를 즉시 제출하고, 주민참여예산 관련 서식을 행정안전부 매뉴얼에 맞게 정비할 것. 향후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임의적인 기한 연장이 없도록 주의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기 획 조 정 실 (법 무 담 당 관)	□ **데이터 기반의 성과관리-예산 연계 시스템 강화** ○ (지적사항) 주요 재정사업 평가 시 목표 달성 여부가 정성적 평가에 치우쳐 있어, 성과계획서와 예산 간의 실질적인 연계가 부족하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음. ○ (요구사항) 주요 재정사업 평가 시 목표 달성 여부를 정성적 평가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 지표로 병행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해 예산 편성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 □ **예산 실무자 데이터 역량 강화 및 협업 프로세스 구축** ○ (지적사항) 데이터 기반 행정이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 예산 실무자들이 부서에서 제출한 데이터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이 부족함. ○ (요구사항) 예산 실무자들이 통계 분석 및 데이터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초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또한, 예산담당관실의 인력 한계를 고려하여 스마트시티과 등 전문 부서와 시범적인 협업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 심의를 지원받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행정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 수행 관리·감독 강화** ○ (지적사항) 민사소송 대비 행정소송의 승소율이 60% 미만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행정 처분의 적법성 및 신뢰도 하락이 우려됨. ○ (요구사항) 현재 진행 중인 항소·상고심 사건에 대해 면밀히 대응하여 최종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아울러, 반복적으로 패소하는 행정 처분 유형을 분석하여 실무 부서에 전파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기 획 조 정 실 (정보통신담당관)	□ **고문변호사 운영 내실화 및 자문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지적사항) 자문 건수가 5회 미만인 변호사가 존재하는 등 특정 변호사에 대한 쏠림 현상과 일부 변호사의 불성실한 자문 태도(단답형 답변, 자문 기피 등)가 확인됨. 이는 낮은 자문료 등 구조적 문제와 변호사 개인의 성실도 차이에 기인함. ○ (요구사항) 자문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차기 위촉 배제 등 평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정비할 것. 또한, 양질의 법률 자문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자문료 현실화 검토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 **개인정보 보호 조례 수정안의 신속한 재입법 추진 및 구체적 계획 수립** ○ (지적사항) 지난 임시회에서 지적된 법령 인용 오류(구법 인용) 및 타 법령(공공기록물법 등)과의 충돌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으며, 최근 급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함. ○ (요구사항) 지적된 법적 오류를 완벽히 해소하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단서 조항을 포함한 수정 조례안을 마련할 것. 아울러, 차기 회기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입법 추진 계획(시기, 보완 내용 등)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 **산하기관 포함 전수조사 실시 및 피해 구제 방안 선제적 마련** ○ (지적사항) 고양도시관리공사 해킹 사건 등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취약점이 드러난바, 시 전체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 실태 점검 및 피해 발생 시 구제 대책이 미흡함.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요구사항) 본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을 포함한 시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할 것. 또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시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이나 공제회 가입 등의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하여 보고할 것. **□ 재난 대비 행정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백업 체계 고도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례에서 보듯, 데이터센터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시스템 마비 위험이 있음. 현재 고양시 내부 행정시스템은 이중화가 되어 있지 않아 물리적 손상 시 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음. ○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동기화 및 이중화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재해 복구(DR) 체계를 고도화하여 중단 없는 행정 서비스를 보장할 것. **□ 전산실 화재 예방을 위한 기반 시설 안전 관리 강화 및 공간 분리 추진** ○ 전산실 내 UPS 및 리튬 배터리 등 화재 위험 요소가 상존하나, 현 청사의 공간적 한계로 인해 안전거리 확보 및 별도 격리 공간 마련이 미흡함. ○ 특히 리튬 배터리 수명 관리와 정기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 **□ 미래 수요를 반영한 통합 데이터센터(전산실) 이전 및 확장 검토** ○ 백석 업무빌딩 등 관내 가용 자원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증가할 데이터 수요와 AI 기반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통합 데이터센터 이전 계획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보고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시의원 행정전자서명(GPKI)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및 조치 이행** ○ (지적사항)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시의원이 GPKI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인증관리센터 질의 결과 발급 가능하다는 답변이 존재하는 등 해석이 상충됨. 특히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의정 활동 지원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 (요구사항)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등 소관 기관에 시의원의 GPKI 발급 가능 여부를 공식 문서(공문)로 질의하고, 그에 대한 공식 답변을 근거로 발급 절차를 진행하거나 불가 사유를 명확히 소명할 것.
고 양 연 구 원	□ **고양시체육회 성과평가 부실 검증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 (지적사항) 고양시체육회 성과평가 과정에서 정산 보고 지연 및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명백한 감점 요인이 있었음에도, 연구원이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우수' 등급을 부여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함 ○ (요구사항) 금번 평가의 오류를 인정하고, 향후 외부 용역 및 성과평가 수행 시 피평가 기관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각적인 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검증 절차를 강화할 것 □ **시민 밀착형 현장 연구 지속 추진 및 확대** ○ (지적사항) 특별한 지적사항 없음 (우수 사례 격려) ○ (요구사항) 지역 주민 의뢰 과제와 같이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시민 친화적 연구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불용액 최소화 대책 마련** ○ (지적사항) 각종 세미나의 호텔 개최 등 낭비성 지출과 연구 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 청사 이전 지연에 따른 임대료 중복 지출 등 재정 운영이 방만함 ○ (요구사항) 공공기관 회의실 활용 등을 통해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고, 연간 연구 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균형 있게 예산을 집행할 것. 또한, 무리한 예산 소진을 지양하고 불용액은 반납할 것 □ **연구 품질 강화 및 정책 기여도 향상 방안 수립** ○ (지적사항) 연구 과제 수는 증가했으나 자가복제 등 질적 저하가 우려되며, 실제 시정 정책으로의 반영률이 30% 미만으로 저조함 ○ (요구사항) 연구 보고서 전수 조사를 통해 자가복제 실태를 점검하고, 표절 검사 기준(카피킬러 등)을 엄격히 적용할 것. 아울러 실·센터별로 시정에 즉시 적용 가능한 정책을 1건 이상 발굴·제안하여 연구원의 존재 가치를 입증할 것 □ **조직 내 갈등 해소 및 행정 시스템(소송, 복무) 전면 정비** ○ (지적사항) 내부 갈등으로 인한 소송 남발, 소송 관리 대장 부재, 특정인의 과도한 초과근무, 방만한 대외활동 규정 등 조직 관리 전반이 붕괴된 상태임 ○ (요구사항) ①소송 관리 대장 작성 및 예산 통제 강화 ②초과근무 실태 전수 조사 및 업무 재분장 ③대외활동 규정을 국민권익위 권고안(월 3회 제한 등)에 맞춰 개정 ④규정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위촉하여 투명성 확보 ⑤조직 진단 및 갈등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 안정화 도모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고양혁신 전략 세미나 운영 체계화 및 목적 명확화 요구** ○ 고양상공회의소와 공동 주최하고 분기별로 진행되는 세미나의 개최 목적과 주 대상(타겟)을 명확히 설정할 것 ○ 지난 6회 진행 동안 시의회 초청이나 홍보가 일관성 없이 진행되었음을 지적하며, 향후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의회와의 소통 강화 요청 ○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단순 행사 개최가 아니라 연구원과 고양시의 혁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운영 당부 □ **복리후생비 집행률 제고 및 결산 자료의 정합성 확보** ○ 건강검진비 및 급량비 등의 집행률이 60% 수준으로 저조함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대비 효율적인 집행 관리 주문 ○ 예산결산 자료 제출 시, 전체 복리후생비 예산액과 세부 집행 내역(기타 란)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를 지적하고 재확인 및 수정 요청 □ **행정 업무 매뉴얼 마련 및 자료 작성 기준 정립** ○ 연도별 제출 자료(중장기 발전계획, 자본총계 등)의 항목 유무나 순서가 일관성이 부족함을 지적 ○ 담당자 변경과 무관하게 일관된 행정 처리가 가능하도록 행정 매뉴얼을 작성하고 명확한 자료 제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교 육 문 화 국 (평 생 교 육 과)	□ **학교 환경개선 사업 예산 감소분에 대한 소명 및 추경 확보 대책 마련** ○ (지적사항) 학교 시설 환경개선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3억 원 감소함에 따라 고양시가 교육 지원을 축소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며, 이에 대한 명확한 예산 재배치 내역이나 대안 설명이 부족함. ○ (요구사항) 감액된 예산이 교육 프로그램 등 타 사업으로 전환되었는지에 대한 상세 내역을 분석하여 보고하고, 자체 공모사업 수요 조사 결과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을 통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 현장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 □ **마을활동가 인력풀 전면 정비 및 강사 검증 시스템 도입** ○ (지적사항) ‘온마을 배움지원센터’의 마을활동가 인력풀이 2019년 이후 활동 실적 점검이나 갱신 없이 방치되어 왔으며, 강사 선발 시 구체적인 검증 기준이 없어 수업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움. ○ (요구사항) 현재 등록된 강사들의 활동 이력을 전수 조사하여 실적이 저조한 인원을 정리하고, 단순 자격증 소지 여부를 넘어 수업 계획서 평가 등 실질적인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선발 시스템과 주기적인 인력풀 갱신 제도를 마련할 것. □ **학교 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 편중 문제 개선 요구** ○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교육경비 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정 고등학교는 6회나 지원받은 반면 다수의 학교는 지원 횟수가 적거나 없는 등 학교별 편차가 심각함을 지적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교육청과의 5:5 매칭 사업 외에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소외되는 학교 없이 균형 잡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 **□ 학교 시설 개방 인센티브 부여 요청** ○ 학교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환경 개선사업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 요청 ○ 실제 개방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교육청과의 협력 강조 **□ 학교 환경개선 사업 선정시 지자체와 시의원 권한 확보 및 제도 개선** ○ (지적사항) 학교 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시비 50%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사업 대상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이 교육청 주도로만 이루어져 지역 현장의 시급한 수요와 시의회의 의견 반영이 구조적으로 어려움. ○ (요구사항) 향후 사업 추진 시 선정위원회에 시의원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시비 매칭 비율에 상응하는 일정 부분의 사업 선정 권한을 고양시가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강력히 협의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 **□ 주요 재정 사업 폐지·변경 시 객관적 근거 자료(평가서 등) 작성 의무화** ○ (지적사항) '학교 자율과정 운영 지원' 사업(12억~16억 규모)을 폐지하고 신규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한 평가서나 폐지 결정을 위한 공식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적인 근거 문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음.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연속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임. ○ (요구사항) 향후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폐지하거나 신규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단순히 내부 회의나 구두 협의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사업 평가서’, ‘폐지/변경 사유서’, ‘관련 회의록’ 등 명확한 근거 자료를 문서화하여 남길 것. **□ 예산 사업 변경 사항에 대한 명확한 의회 보고 및 안내 철저** ○ (지적사항) 예산 심의 자료 작성 시, 기존 사업의 폐지와 신규 사업의 연계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의회의 혼란을 초래함. 또한, 사업 폐지 사실이 일선 학교에 충분히 안내되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요구사항) 예산 설명 자료 작성 시 세부 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 변경 사항을 의회와 수혜 대상(학교 등)에 정확하고 공식적인 문서로 안내할 것.
교 육 문 화 국 **(체 육 정 책 과)**	**□ 고양시체육회 성과평가 오류 인정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지적사항) 2024년도 체육회 부서 평가에서 정산 지연, 예산 집행 잔액 과다(18% 이상), 부적정 퇴직금 지급 등 명백한 감점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95점(매우 우수)을 부여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함. ○ (요구사항) 해당 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문서를 남기고(조치사항 반영), 향후 보조금 관련 평가 시 정량적 지표(정산 기한 준수 여부, 부정수급 여부 등)를 철저히 검증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고양시체육회 초과근무수당 및 복무 관리 전수 조사** ○ (지적사항) 사전 허가 없는 초과근무, 실제 근무 시간과 다른 지문 태그, 과도한 수당 수령 등 복무 기강 해이 및 예산 낭비 사례 확인. ○ (요구사항) 체육회 사무국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초과근무 내역(사전 승인원, 지문 기록, 실제 업무 내역 대조)을 전수 조사하고, 부당 수령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 □ **보조금 정산 관리 강화 및 가압류 사태 해결** ○ (지적사항) 경기도체육대회 등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내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조금 통장이 가압류되는 행정 난맥상이 발생함. ○ (요구사항) 종목단체 및 체육회의 보조금 정산 기한을 엄수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가압류된 보조금 잔액(약 699만 원)의 반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 **고양시체육회 조직 정상화를 위한 혁신안 제출** ○ (지적사항) 체육회 내부의 고소·고발, 직무대행 사임, 임금 체불 서명 운동 등 조직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으나 주무 부서의 개입이 소극적임. ○ (요구사항) 체육회 정상화를 위한 혁신안 제출 요구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제출에 대한 엄중 경고 및 재발 방지** ○ (지적사항) 보험 지급 내역이 다수 존재함에도 '0건'으로 제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형해화하는 부실한 자료 제출이 발생함. ○ (요구사항)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료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실히 감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직장운동경기부 단체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산 현실화** ○ (지적사항) 현재 가입된 보험은 선수들에게 필수적인 '상해 치료' 보장이 취약하고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이 떨어짐. ○ (요구사항) 내년도 보험 계약 시 불필요한 담보는 제외하고 '상해 실손 의료비' 등 선수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보험을 재설계할 것. 필요시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선수 보호를 강화할 것. □ **여성 풋살대회 예산 및 적정성 재검토** ○ (지적사항) 통상적인 풋살대회와 달리 고가의 대관료가 소요되는 킨텍스 전시장에서 대회를 개최하여 과도한 예산(8천만원)이 편성됨. ○ (요구사항) 해당 대회의 보조금 산출내역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향후 대회 개최시 불필요한 대관료 낭비를 줄이고 통상적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등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태권도 시범단 이동 차량 및 장비 운송 지원 대책 수립** ○ (지적사항) 초중고 학생들로 구성된 시범단이 무거운 장비를 들고 대중교통이나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여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요구사항) 시범단의 안전한 이동과 원활한 공연 지원을 위해 장비 및 인원 수송용 차량(승합차 등)을 임차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산 편성과 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 □ **고가하부 등 유휴 부지 활용 전천후 체육시설 조성 추진** ○ (지적사항)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이트볼장 등이 야외에 있어 혹서기 혹한기 이용에 어려움이 큼. ○ (요구사항) 안성시 등 타지자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청 앞 고가 하부 등 관내 유휴 부지에 전천후 체육시설 게이트볼 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국도비 확보에 적극 나설 것.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형식 준수 및 기한 엄수** ○ (지적사항) 의원이 요구한 기한을 10일 이상 넘겨 자료를 제출하고, 분석이 불가능한 PDF 형태로 제출하여 감사를 방해하는 행태가 발생함. ○ (요구사항)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시 제출 기한을 엄수하고,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엑셀 등 편집 가능한 파일 형태로 제출할 것. □ **고양시장애인체육회 정기 지도 감독 정례화** ○ (지적사항) 연간 13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임에도 12년 동안 단 한 번의 감사도 실시하지 않아 대규모 비위 행위를 방치함.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양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 및 회계 감사를 제도화하여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 □ 지적사항 미이행 건에 대한 즉각 조치 및 경영공시 이행 ○ (지적사항) 2024년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업무분장표(연락처 포함) 게시 및 경영공시 이행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음 ○ (요구사항) 즉시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업무분장과 담당자 연락처를 게시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누락된 경영공시 사항을 규정에 맞게 공개할 것. □ 2024년 하반기 차량 운행 및 출장비 집행 실태 샘플링 점검 ○ (지적사항) 과거 대규모 환수 조치 이후에도 관행적인 비위가 지속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요구사항)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의 실제 차량 운행 기록과 출장비 지급 내역에 대해 20% 이상 샘플링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 사항 재발 여부를 확인할 것. □ 직장운동경기부 홍보 강화 및 누리집 전면 개편 ○ (지적사항)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시민 인지도가 낮으며, 홈페이지에 전체 선수단 정보가 누락되어 있고 홍보 예산이 전무함. ○ (요구사항) 시청 누리집에 감독, 코치, 선수 전원(57명)의 프로필을 등재하고, 언론홍보담당관과 협력하여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 구체적인 도시 브랜딩 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고 양 시 체 육 회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전면 개정 검토 ○ (지적사항) 현행 조례가 2013년 제정 이후 실질적인 운영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요구사항) 선수 관리 투명성, 성과 평가 체계,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하여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례 전면 개정을 검토할 것. □ 생활체육 대회(시장·의장·협회장배)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 (지적사항) 관행적인 대회 중복 개최로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고, 참가자 명단 관리가 되지 않아 저변 확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요구사항) 대회의 통합 개최 여부를 포함하여 생활체육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고, 참가자 명단 관리를 통해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 □ 공공체육시설 불법 게시물 정비 및 관리 감독 강화 ○ (지적사항) 공공체육시설인 테니스장에 허가받지 않은 특정 업체의 광고 현수막이 장기간 게시되어 있었음. ○ (요구사항) 관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불법 게시물을 즉시 철거하고, 위탁 관리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 초과근무 관리 강화 및 생활체육지도자 본연 업무 보장 ○ (지적사항)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초과근무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장 지도가 주 업무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행정 업무에 동원되어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등 인력 운영이 비효율적임.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요구사항) 생활체육지도자가 행정 업무가 아닌 본연의 지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초과근무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 보조금 통장 압류 해소 및 정산 기한 엄수 ○ (지적사항) 직원들의 임금체불 소송으로 인해 공적 자금인 보조금 통장이 압류되어 사업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며, 보조사업 정산 보고가 조례에 규정된 기한을 상습적으로 넘기고 있음. ○ (요구사항) 압류된 보조금 통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시민을 위한 체육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향후 보조금 정산 보고 기한(사업 종료 후 2개월)을 철저히 준수할 것. □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절차 개선 및 서명 진위 규명 ○ (지적사항) 임원 연임 심의 시 사무국 직원이 정량평가를 주도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서면 결의서의 서명 필체가 상이하여 대리 서명 의혹이 있음. ○ (요구사항) 정량평가를 포함한 모든 심의 과정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지적된 서면 결의서 서명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여 보고할 것. □ 감사 지적사항(22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지적사항) 특정감사 등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 수당 지급, 복무 관리 등 총 22건의 징계 및 시정 요구를 받았으나 개선이 미흡함.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요구사항) 기 지적된 22건의 감사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해 완벽한 이행 조치를 취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것. **□ 홈페이지 기능 정상화 및 사업 홍보 접근성 개선** ○ (지적사항) 홈페이지 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주요 사업의 공지사항 확인이 불가능하며, 시민들이 사업 참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차단되어 있음. ○ (요구사항) 즉시 홈페이지의 오류를 수정하여 시민들이 사업 정보를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홈페이지 외에 배너 활용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가동하여 정보 접근성을 확보할 것. **□ 보조금 지원 사업의 운영 주체 및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 검토** ○ (지적사항)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G-스포츠클럽 등 주요 보조금 사업을 관행적으로 체육회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반드시 위탁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불분명함. ○ (요구사항) 해당 사업들을 반드시 체육회를 통해 위탁 운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조례 해석 결과를 보고할 것. **□ 조직 내 갈등 해소 및 정상화 방안 마련 요청** ○ 체육회장 공석, 임원진 및 이사회 리더십 부재 등 조직 내 갈등과 혼란을 지적.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내부 직원 간 신뢰 회복, 사기 진작, 갈등 봉합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 요구. ○ 임원진, 이사회, 대의원 등 조직 결속력 강화와 새로운 리더십 구축 필요성 강조. **□ 직원 사기 진작 및 인사관리 개선 요청** ○ 직원 간 갈등, 소송, 임금체불 등 인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 요구. ○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실질적 방안(소통, 화합, 신뢰 회복 등) 마련 요청. **□ 체육회 발전 계획 수립 요청** ○ 고양시 체육회 미래 발전을 위한 구체적 분석 및 계획(모색 분석 등) 수립을 권고. ○ 타 도시 사례 벤치마킹, 공청회,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한 계획 수립의 필요성 강조. **□ 고양시체육회 사무국 임대료 예산 편성의 비효율성 및 체계 미비** ○ 제출자료상 사무공간을 '사무국/사무실'로 나누고, 동일 성격의 임대료가 서로 다른 예산 항목(목)으로 처리되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 ○ 도시관리공사가 공간(호실)만 구분해 임대료를 부과할 수는 있으나, 체육회 내부 집행은 "통(총액) 임대료"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민선 전 체계의 관행이 그대로 남아 혼선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 주무부서와 협의해 내년도부터 임대료 예산 항목 통합 등 정비를 검토·변경할 것을 요청. **□ 학교시설 공유제 사업의 운영 실효성 점검 및 개선 요구** ○ 학교별 배치 지도자(관리매니저)의 역할(수업 수행 여부, 안전 관리 등)과 필수 자격(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등)을 확인 ○ 서로 성격이 다른 종목(예: 배드민턴·배구·농구 등)을 동일 지도자가 지도하는 구조에 대해 신뢰·전문성 측면의 우려를 제기. ○ 사업이 2019년경부터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누적된 문제점이 있었을 텐데 지속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학교시설 공유제 관련 “구체 자료” 제출 및 연말(12월) 종료 후 진단·내년도 운영방향 정리를 요구. **□ 학교시설공유제 민원 원인 분석 및 운영 개선** ○ (지적사항) 학교시설공유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생활체육 지도자와 관련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성과 운영 안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요구사항)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학교시설공유제 관련 민원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지도자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초과근무수당 부당 청구 전수조사 및 법적 조치 검토** ○ (지적사항) 수기 초과근무대장과 보안시스템 (지문인식) 로그 기록 간의 퇴근 시간 불일치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산정된 임금체불 주장은 신뢰할 수 없음.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자 치 행 정 국 (행 정 지 원 과)	○ (요구사항) 임금체불 내역에 포함된 초과근무 기록 전체를 실제 보안시스템 로그와 전수 대조하여 허위 청구 여부를 가려내고, 고의적인 조작이 확인될 경우 환수 및 법적 조치를 취할 것. □ **홈페이지 내 필수 정보 현행화 및 유지보수 체계 개선** ○ (지적사항) 예산 부족을 핑계로 시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기구표, 업무분장, 연락처 등 기초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 ○ (요구사항) 즉시 가용 예산을 활용하거나 자체 인력을 통해 홈페이지 내 조직 및 업무 관련 정보를 최신화하고, 시민 접근성을 제고할 것. □ **생활체육진흥조례 위탁 조항에 대한 올바른 법적 해석 적용** ○ (지적사항) 체육회가 '생활체육진흥조례'를 근거로 모든 사업의 독점적 위탁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답변함. ○ (요구사항) 해당 조례는 위탁이 가능하다는 임의 규정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사업 위탁 시 체육회 외의 대안도 검토할 수 있도록 법적 해석을 정정하여 보고할 것. □ **현장 근무 직원(청원경찰 등) 근무환경에 대한 선제적 관리 강화** ○ (지적사항) 청원경찰들이 근무 중 추위 등 불편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 창구의 부재나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담당 부서에 적시에 건의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상황이 발생함.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요구사항) 행정지원과는 청원경찰을 비롯하여 청사 내 현장 근무자들이 근무 중 겪는 불편 사항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이들이 애로사항을 편안하게 개진할 수 있도록 소통 및 복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국제 우호 교류 사업의 선정 기준 정립 및 성과 관리 강화**
	○ (지적사항) 국제 교류 사업이 단순 행사성 외유로 오해받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교류도시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교류 이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함.
	○ (요구사항) 교류도시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수립하고, 교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 또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교육, 문화, 관광 등)로 교류를 확대할 것.
	□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협소한 구내식당 개선**
	○ 식당 공간이 협소하여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을 지적.
	○ 공간 협소가 근본적 문제임을 지적하며, 인근 건물 임대 등 대체 공간 확보 방안을 제안.
자 치 행 정 국 (인 적 자 원 과)	□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렬 배치 준수 철저**
	○ (지적사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5, 6에 규정된 부서장(5급 이상)의 직렬 기준과 실제 배치된 인원의 직렬이 불일치하는 사례(구청 환경녹지과, 삼송1동 등)가 있음에도 주무 부서에서 현황 파악이 미흡함.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요구사항) 구청 환경녹지과장 및 삼송1동장을 포함하여 5급 이상 부서장의 직렬 배치가 시행규칙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전수 점검하고, 불일치 사항 확인 시 즉각적인 시정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인사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 혁신 방안 마련** ○ (지적사항) 인사 운영 만족도 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현행 평가 시스템이나 승진·전보 과정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감지됨. ○ (요구사항) 단순한 설문조사 결과 확인에 그치지 말고, 직급별·직렬별·근무연수별 불만 요인을 세분화하여 분석할 것. 이를 바탕으로 다면평가 피드백 강화, 격무부서 인센티브 현실화 등 체감 가능한 인사 혁신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관리자급 여성 공무원 육성 및 공정한 기회 보장** ○ (지적사항)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여성 공무원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현상이 뚜렷하며, 이는 승진의 발판이 되는 주요 기피·격무 부서 배치 등에서 구조적 배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요구사항) 기획, 예산, 인사 등 주요 부서 배치 시 특정 성별이나 소수 직렬이 배제되지 않도록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할 것. 또한 육아휴직 등 경력 공백을 극복하고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 및 리더십 교육 등 중장기적 로드맵을 구축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파견 공직자 선정, 근무, 복귀, 보상, 성과 관리 등 전반에 대해 감사하고, 제도적 보완 및 체계적 관리, 우수사례 공유 등 개선 요청** ○ 정기적으로 우수사례를 모아 백서 등으로 제작, 조직 내 공유 요청. ○ 파견 전 기본 매뉴얼 제공, 복귀 시 성과 및 제안사항 제출 등 제도화 제안. □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을 위한 공직자 교육 과정 개편** ○ (지적사항) 현재 정책 입안 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보다는 관행이나 추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정책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의회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함. 또한,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AI 및 빅데이터 분석 관련 전문 교육이 부족함. ○ (요구사항) 내년도 교육 계획 수립 시 AI 및 빅데이터 분석 과정을 단순 소양 교육이 아닌 직무 필수 역량 강화 과정으로 편성하고, 스마트시티과 등 유관 부서와 협력하여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커리큘럼을 개발할 것. □ **인사 청렴도 및 만족도 하락 원인 규명 및 근무성적평정 공정성 강화** ○ (지적사항) 인사 관련 청렴도 및 만족도 지표가 2년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인용률이 높은 것은 고양시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음을 시사함.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요구사항) 단순한 정원 부족이나 승진 적체 탓으로 돌리지 말고, 인사 만족도와 청렴도 점수 하락의 실질적인 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것. 또한, 근무성적 평정 시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기준 준수 및 부서장 교육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자 치 행 정 국 (주 민 자 치 과)	□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시 소관 상임위 사전 협의 및 절차 준수** ○ (지적사항)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등 부서 소관 위원회 위원 구성 시, 관례와 달리 소관 상임위원장과의 사전 협의 없이 타 상임위 위원이 위촉되는 등 소통 부재 및 절차적 아쉬움이 발생함. ○ (요구사항) 향후 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위촉 과정의 행정 절차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이행할 것.
	□ **인권·통일 교육 성과 관리 체계(만족도 조사 등) 강화** ○ (지적사항) 인권 및 통일 교육 추진 실적이 단순 횟수 위주로 나열되어 있어 교육의 질적 성과와 수강생의 인식 변화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 ○ (요구사항)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사전·사후 만족도 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선에 환류하여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을 도모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고양시 44개동 주민자치 현황에 관한 고양연구원 연구를 수행할 것** ○ (지적사항) 고양시 관내 44개동별로, 추첨 방식의 위원 선정 비율에 관한 의견, 주민센터 및 민간위탁업무 관련 시설 운영을 위한 센터장 선임 또는 선출 방법, 문화교실의 규모, 비용, 참가자 수, 주민총회 안건 참여자 수 및 동 인구 대비 참여율 등에 관한 의견과 현황이 상이함. ○ (지적사항) 주민자치회 운영 및 민간위탁 시 비용 지출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내외부의 다양한 형태의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때마다 가치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규정 또는 표준 정관이나 표준 세칙 등의 자료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각 동별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요구사항)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각 44개 동별 현황에 대하여 고양연구원의 연구를 진행하고,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다른 동의 각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갈등 상황의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할 것. ※ 기준 제시 사항 - 주민자치회 전체 구성원 수, 추첨방식으로 선발된 사람의 구성비 - 주민자치회 회의 요일 및 시간 - 주민자치회 위탁사무 여부 및 사례 - 주민자치회의 국가 또는 지자체 사무 민간위탁 사례 - 주민자치회 총 예산 상황 - 주민자치회에서 사무국장 및 센터장을 임명하는 절차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주민자치회에서 봉사료/수당/식대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기준 - 주민자치회에서 별도로 구성된 위원회 등 소조직 - 각 동별 주민자치회 문화센터 문화강좌 및 수강생 수, 수강료 - 각 동별 주민총회 안건심사 참여자 수 및 동 인구수 대비 참여율 -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주민자치회 만족 수준 및 갈등 상황 등 **□ 주엽커뮤니티센터 관련 주민자치회 고문 대표 위임의 적법성** ○ 주민자치회 고문이 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커뮤니티센터 대표를 맡게 된 경위와 적법성에 대해 질의 ○ 고문은 의결권이 없는 예우직임에도 불구하고, 대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 제기 **□ 전임회장 퇴임과 세칙 개정 시점 관련 점검 및 개선 요청** ○ 전임 주민자치회장 임기 종료와 커뮤니티센터 운영 세칙 개정 시점이 가까워, 세칙 개정이 대표 위임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 ○ 관련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여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 **□ 청년공작소 과거 운영 데이터 확보 및 입주 심사 관리 철저** ○ 위탁 기관 변경을 이유로 2023년 이전(고양시민회 운영 당시)의 입주 현황 및 운영 자료가 전무하여, 장기 입주 여부나 운영 성과를 파악할 수 없음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커뮤니티센터 공간이 일부 입주자(또는 단체)에게 장기간 임대되는 사례가 있어, 대기자가 있음에도 새로운 입주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 ○ 입주자 선정, 재계약, 운영위원회 심의 등 임대 및 운영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점검 필요 및 개선 방향을 검토할 것 ○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 및 운영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와 자료 관리 체계화에 대한 개선 요청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지정기부제’ 도입 검토** ○ (지적사항) 현재 일반적인 기부 모금 방식으로는 타 지자체 대비 경쟁력이 부족하며,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적 사업이 부재하여 고액 기부 유치에 한계가 있음. ○ (요구사항)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알고 기부할 수 있도록, 고양시만의 특색 있고 공감 가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정기부제’를 적극 도입할 것. **□ 고향사랑기부제 중장기 목표 수립 및 전략적 홍보 강화** ○ (지적사항) 2026년 모금 목표액만 설정되어 있을 뿐,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기금 운용 로드맵이 부재함. ○ (요구사항) 단순한 목표액 설정에 그치지 말고, 관내 기업 및 직장인(타지역 거주자)을 대상으로 답례품의 효용성을 홍보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모금 전략과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주엽1동 커뮤니티센터 위탁 운영 구조 전면 재검토 및 정상화** ○ (지적사항) 주민자치회가 위탁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고문(전임 회장)’을 센터 대표로 지정하고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독립 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은 협약의 취지를 벗어난 의혹이 있음. 또한, 특정인이 회장 임기 만료 직전 세칙을 개정하여 센터 대표직을 유지하는 등 공공시설의 사유화 정황이 포착됨 ○ (요구사항) 해당 운영 구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 법령 및 위수탁 협약상 ‘제3자 위탁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 법률 자문을 거쳐 명확히 판단할 것. 위법 소지가 있을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고,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청년공작소 등 공공시설 입주자 선정 기준 정비 및 투명성 강화** ○ (지적사항) 청년공작소 입주자 선정 시 ‘청년’에 대한 명확한 연령 기준이 부재하고, 장기 입주자로 인해 대기자가 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 특정인의 독점적 이용이 우려됨 ○ (요구사항) ‘청년’ 등 우선 선정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연령 등)을 수립하고, 입주 기간 제한 및 순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다수의 시민에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운영 규정을 정비할 것 □ **동별 방문 민원 처리 현황 전수 조사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 (지적사항) 시장의 동별 방문 시 접수된 민원이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행정 신뢰도를 저하시킴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자 치 행 정 국 (민 원 여 권 과)	○ (요구사항) 최근 3년간(2023~2025년) 동별 방문에서 접수된 민원 처리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처리 결과(완료, 진행 중, 불가)를 명확히 분류하고, 민원인에게 처리 결과를 피드백하는 체계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 김대중 사저 기념관 조속한 보수 및 개방 계획 수립** ○ (지적사항) 김대중 사저 기념관이 매입 목적과 달리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대대적 보수 후 개방’ 요구가 이행되지 않음 ○ (요구사항) 2026년도에는 실질적인 보수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과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매입 목적에 맞는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업무 실적 보고서의 객관적 작성 및 통일 교육 내실화** ○ (지적사항) 예산 삭감 및 사업 축소에도 불구하고 실적 보고서에 ‘확장’ 등의 긍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성과를 부풀림 ○ (요구사항) 업무 실적 보고서에서 사실과 다른 ‘확장’ 등의 표현을 삭제 및 수정하고, 향후 보고서 작성 시 객관적 지표에 근거하여 작성할 것. 또한, 예산 감소 상황에서도 통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할 것 **□ 시정 모니터 운영 방식 개선 및 정책 반영률 제고** ○ (지적사항) 시정 모니터 요원들의 제안 건수는 많으나 실제 정책 반영이나 시정 조치로 이어지는 비율이 극히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요구사항) 시정 모니터 운영 성과를 단순 제안 건수가 아닌 ‘정책 채택률’ 및 ‘실행률’ 중심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과 지표를 개선하고, 시민의 의견이 사장되지 않고 시정에 환류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것. □ 복합 민원 책임 행정 강화 및 원스톱 서비스 구현 ○ (지적사항) 복합 민원의 경우 부서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전전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 (요구사항)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뿐만 아니라, 접수 단계에서 주무 부서를 지정하여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민원 처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강화할 것. □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부서 차원의 보호 강화 ○ (지적사항) 악성 민원 대응 컨트롤타워가 타 부서(소통협치담당관)에 있어, 실제 민원 창구 부서에서는 피해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지원 현황 파악이나 실질적 보호 조치가 미흡할 우려가 있음. ○ (요구사항) 민원여권과는 소통협치담당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소속 직원들이 소송 지원, 고발 대행 등 실질적인 법률 보호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부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기고 보호 체계를 점검할 것. □ 민원처리 착오 현황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유형별 분석 실시 ○ (지적사항) 민원여권과가 민원 총괄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 착오 현황을 각 부서에 일임한 채 통합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리하지 않아 착오 유형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 불가능함. ○ (요구사항) 민원처리 착오 현황을 정기적으로 취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착오 유형을 분류·분석하여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후 의회에 보고할 것.
자 치 행 정 국 (회 계 과)	□ **직원 단체보험 운영 효율성 분석 및 관리 강화** ○ (지적사항) 직원 단체보험이 반복적인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 기회가 축소되었으며, 보장 내용 확대에 따른 지급률(손해율) 변동 추이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요구사항) 매년 갱신되는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과 실제 보험금 지급 현황을 분석하여, 수의계약 체제 하에서도 예산 낭비 없이 직원 후생복지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계약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입력 관리 감독 강화** ○ 수의계약 통계 산출 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입력 누락 가능성이 있어 통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물품 구입, 용역, 임대 등 모든 유형의 수의계약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누락 없이 입력되도록 전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결산 결과의 예산 편성 환류를 위한 실질적 협업 시스템 구축** ○ (지적사항) 업무 실적 보고서에는 결산 분석 결과를 예산 편성에 환류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예산부서와의 협업이나 피드백 과정이 전무하여 보고서 내용이 허구에 가까움. ○ (요구사항)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이 유기적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회계과와 예산담당관실 간의 정례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결산 분석 결과가 차기 예산 편성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및 운영** ○ (지적사항) 현행 수의계약 제도 하에서는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될 우려가 있으며, 신규 및 영세 관내 업체의 진입 장벽이 존재함. ○ (요구사항) 2026년부터 특정 업체의 연간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더 많은 지역 업체가 공공 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자 치 행 정 국 **(재 산 관 리 과)**	□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일정 준수 및 공정 관리 철저** ○ (지적사항)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의 준공 예정일이 수차례 변경(2025년→2028년)되면서 행정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주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됨. ○ (요구사항) 향후 일정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종 심의 및 인증 절차 등 행정 소요 기간을 최소화하여 목표 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유재산 총조사(일제정비) 오류 건을 계획대로 마무리 할 것**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오류 자료(공부, 등기부 등) 기반으로 공유재산의 누락, 오류, 불일치 건을 신속하게 정비할 것. ○ 총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필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의 재산으로 등재할 것. ○ 무단 점유지 확인을 통해 변상금 부과 등 세외수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미활용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할 것. □ **탄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 일정 준수 및 관리 철저** ○ (지적사항) 탄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이 BF 인증 심사 지연 및 각종 행정 절차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1년 이상 지연됨에 따라, 임차 청사 사용에 따른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인근 탄현 근린공원 조성 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 행정 효율성이 저하됨. ○ (요구사항) 변경된 추진 일정(2027년 3월 착공 목표)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고, 행정 절차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 □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 관리 강화** ○ (지적사항) 시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무단 점유 변상금의 경우 징수율이 25%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여 세입 손실 및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요구사항) 연말까지 대부료 및 사용료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징수율을 제고할 것. 또한,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과 등 유관 부서와 협조하여 채권 확보 등 가능한 행정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것.
	□ 김대중 대통령 사저 등 목적형 재산 관리·감독 강화
	○ (지적사항) 김대중 대통령 사저가 매입 목적(평화·인권 교육 등)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음에도, 재산관리과가 관리 전환(주민자치과)을 이유로 관리·감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 (요구사항) 공유재산 총괄 부서로서 해당 재산이 당초 매입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목적 외로 방치될 경우 용도 변경이나 관리 부서 재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고 양 시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 스토리텔링 대회 심사 방식 개선 및 정착**
	○ (지적사항) 자원봉사 스토리텔링 대회 등 경연 행사 시 심사위원 평가 방식은 사전 로비나 인맥 동원 등 불공정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심사비 지급 등 예산 소요가 발생함
	○ (요구사항) 향후 대회 운영 시 전문 심사위원 위촉을 지양하고 현장 청중 평가단 투표 방식을 전면 도입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절감을 도모할 것.
	□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 유도 및 교육 강화
	○ (지적사항) 학교 생활기록부 봉사활동 실적 반영 축소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급감하고 있어, 미래 세대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 어려움이 예상됨.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요구사항)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의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학교 및 교육청과 연계한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육을 확대하고,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것. □ **봉사자 출결 상황 확인 제안** ○ (지적사항) 현재 봉사자(특히 거점센터)들의 출결 확인이 어려움. ○ (요구사항) 다른 시군구의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출결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재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출결 관리 수준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지, 낮은지, 평균 수준인지를 확인하기 바람. ○ (요구사항) 모든 출결 상황을 빠짐없이 완벽히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어도 민원을 제기하거나 제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그 사례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분위기 조성을 해주기 바람. □ **자원봉사센터 근태관리 방식에 대한 제안** ○ 기존의 카톡 출석 확인 방식이 신뢰에만 의존하고 있어, 외부 감사나 민원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 ○ 사진 인증 등 보다 객관적인 방법 도입을 통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자원봉사센터가 위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출근·퇴근 시간의 명확한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청.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대외 수익성 행사 지원시 비용 분담 원칙 수립 및 규정 마련** ○ (지적사항) 고액의 참가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타지자체 또는 민간 주도의 수익성 행사에 고양시 자원봉사센터가 아무런 비용 보전 없이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시 재정 및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임. ○ (요구사항) 단순 공익 행사가 아닌 수익성이 수반되는 외부 행사 지원 요청 시, 주최 측에 자원봉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실비, 운영비 등) 분담을 요구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자원봉사 거점센터 매니저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구조 조정** ○ (지적사항) 거점센터 매니저의 잦은 이석 문제에 대한 전년도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보고 등 실효성 없는 관리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개선 의지가 부족함. ○ (요구사항) 활동비를 지급받는 매니저의 근무 시작과 종료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것. 아울러 15개 거점센터 전수 조사를 통해 이용률이 저조한 센터는 폐쇄 또는 이전하는 등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 **자원봉사 활동 통계의 실질적 분석 체계 마련** ○ (지적사항) 단순 등록 인원이나 연인원(누적) 위주의 통계 관리는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짐. ○ (요구사항) 등록 인원 대비 실활동 인원, 1회성 활동자와 지속 활동자(10회 이상 등)를 명확히 구분하여 데이터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일 산 서 구 청	□ **일산시장 주변 주차 단속의 유연한 운영** ○ (지적사항) 일산시장 주변의 주차 공간 부족 상황에서 과도하고 즉각적인 주차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상권 위축 및 상인들의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요구사항) 일산서구청 및 일산2동 행정복지센터는 시장 상인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장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탄력적 주차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인구주택총조사 관리자 채용 기준 개선 및 조사원 안전 대책 마련** ○ (지적사항) 인구주택총조사 총관리자 선발 시 경력자 우대 관행이 고착화되어 신규 인력의 진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 운영으로 보임. ○ (요구사항) 향후 조사요원 채용 시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채용 기준을 재검토하고, 도농복합지역 현장 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원들의 안전 및 고충 해소 방안을 수립할 것. □ **반복적인 소방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즉각 시정 및 재발 방지** ○ (지적사항) 소방계획 수립, 자위소방대 구성, 소방훈련 실시 등은 법적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감사에서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안전불감증임. ○ (요구사항) 지적된 소방안전관리 미비 사항을 즉시 보완하여 관할 소방서에 보고하고, 향후 동일한 지적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및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혼인신고 기념 서비스(이벤트) 개선 ○ (지적사항) 현재 제공 중인 혼인 축하 물품(혼인 10계명 카드)은 변화하는 결혼 문화와 젊은 세대의 니즈를 충족하기에 부족함. ○ (요구사항)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포토존, 즉석 사진 촬영 등)를 벤치마킹하여, 혼인 신고를 하는 시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기념 서비스를 발굴하고 도입할 것. □ 점심시간 및 주말 주차 허용 정책 개선 요청 ○ 점심시간 및 주말 종교·체육시설 인근 주차 허용 구간의 확대와 안내 표지판 등 주민 안내 강화 필요성을 지적. ○ 타 구청 사례를 참고하여 교통 흐름에 지장 없는 구간에 한해 탄력적 주차 허용 정책 도입을 요청. □ 동별 업무추진비 및 간담회 집행 기준 점검 및 통일 요청 ○ 간담회 등 4개 항목(간담회, 식사비, 물품구입, 격려금)의 집행 기준이 각 동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점검 요청. ○ 간담회 집행 기준의 적용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으니, 기준 적용의 통일성과 실태 점검을 요청. □ 일산시장 노후화 개선안 추진 점검 요청 ○ 일산시장 노후화 개선안 마련이 실제로 연구 의뢰 등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요청. ○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추진 계획 및 사유 파악 요청. ○ 관련 기관 명칭(고양연구원) 최신화 요청.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전동 킥보드 정비 후속조치 보고 요청** ○ 거리 방치 전동 킥보드 정비에 대한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줄 것을 요청. □ **덕이동 데이터센터 기반시설 공사 세부 내역 공개 및 원상복구 계획 수립** ○ (지적사항)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전력구 굴착, 진출입로 공사, 가로수 제거 등이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사 스펙(매설 깊이 등)과 복구 계획에 대한 정보 공유가 미흡함. ○ (요구사항) 초고압 전력 케이블 매설 현황(깊이, 위치), 가감차로 및 인도 설치 완료 시기, 제거된 가로수의 재식재(복구)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공사 현황 자료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가 지역 주차 단속 완화** ○ (지적사항) 극심한 상권 침체 상황에서 경직된 주차 단속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방문객의 발길을 끊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요구사항) 탄현 2지구, 대화동 먹자골목 등 주차 인프라가 부족한 상가 밀집 지역에 대해 교통 흐름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 단속을 유예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일산시장 공영주차장 신속 보수 및 임시 주차 대책 마련** ○ (지적사항) 일산시장 공영주차장의 일부 층 폐쇄가 장기화되면서 전통시장 이용객과 상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민원이 지속 발생함. ○ (요구사항) 소유주인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수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 시설을 정상화하고, 공사 기간 동안 주변 이면도로 활용 등 대체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반복적 감사 지적사항 근절을 위한 인수인계 시스템 강화** ○ (지적사항) 보안 점검, 회계 관리 등 기본적인 행정 업무에서 매년 동일한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것은 인사이동 시 업무 인수인계와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함. ○ (요구사항) 인사이동 시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주요 감사 지적 사례와 필수 점검 사항을 의무적으로 전달하는 체크리스트 기반의 인수인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팀장급 관리자가 이를 확인·감독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것. □ **통장 선출 과정의 공정성 강화 및 적극적 홍보 실시** ○ (지적사항) 10년 이상 장기 재임하는 통장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지원자 부재를 이유로 한 관행적 재위촉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기득권 고착화를 유발함. ○ (요구사항) 통장 모집 시 공고 기간 준수는 물론, 아파트 게시판, SNS, 지역 커뮤니티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신규 주민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일 산 동 구 청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효율화 및 장애 대응 체계 개선 ○ (지적사항) 기기 고장이나 공사로 인한 운영 중단 시 시민 안내가 부족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용률이 저조한 기기에 대한 개선책이 미흡함. ○ (요구사항) 기기 중단 시 현장 안내문 부착 및 대체 발급처 고지를 의무화하고, 이용 실적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여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의 이전 설치 계획을 수립할 것. □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의 정확성 제고 ○ (지적사항) 예산액과 집행액을 혼용하여 기재하는 등 불명확한 자료 제출로 인해 감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위원들의 혼란을 야기함. ○ (요구사항) 향후 자료 제출 시 예산액과 집행액, 기준 시점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고, 자료의 정합성을 철저히 검증한 후 제출할 것. □ 통장 선발 심사 기준 개선 ○ (지적사항) 통장 위촉 심사 시 과거 봉사활동 실적 비중이 높아, 생업으로 인해 봉사 기회가 없었으나 향후 봉사 의지가 있는 주민들의 진입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 (요구사항) 봉사활동 실적이 부족하더라도 통장직 수행을 통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봉사 점수 배점 완화 등 심사 기준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함.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호수공원 운동기구 유지관리 철저** ○ (지적사항) 호수공원 내 운동기구의 녹 발생 및 청결 상태 불량이 지속적으로 방치되어 시민 불편 및 미관 저해를 초래하고 있음. ○ (요구사항) 단순한 이관 통보에 그치지 말고 공원관리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해당 시설물에 대한 즉각적인 보수 및 정기적인 위생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 □ **수의계약 공정성 확보 및 통합 발주 가이드라인 수립** ○ (지적사항)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 대상을 분산시켰으나, 여전히 명확한 시스템과 선정 기준이 부재하여 독점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음. ○ (요구사항) 단순한 업체 배분을 넘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내부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 효율과 지역 업체 보호가 양립할 수 있는 통합 발주 기준 및 3개 구청 공통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 □ **동 행정복지센터 소방안전관리 의무 이행 철저** ○ (지적사항)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 교육, 자위소방대 편성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감사에서 매년 동일한 지적사항(소방안전관리 소홀)이 반복되고 있음. ○ (요구사항)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소방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실제 훈련 실시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하철 3호선 에스컬레이터 고장 문제 및 개선 요청 ○ 백석역, 마두역, 정발산역 등 지하철 3호선 역의 에스컬레이터가 자주 고장나 시민 불편이 크다고 지적. ○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특히 불편을 겪고 있음을 강조. ○ 고장 시 민원 접수 및 처리 주체(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에 대한 안내가 부족함을 언급. ○ 고양시 전체 역세권의 에스컬레이터 고장 현황 및 시민 불편 해소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공식 공문으로 교통국 및 관계 기관에 전달할 것을 제안. □ 통장 위촉 심사 기준 개선 요청 ○ 중산1동의 통장 위촉 심사 시 자원봉사 활동 실적 기준 완화에 대해 종합적 검토 추진이 필요함을 언급. ○ 통장 선발 및 위촉 과정에서 점수 산정 방식, 임기 연장 등 조례 개정 및 보완 필요성을 지적. □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및 개선 요청 ○ 정발산동, 백석1동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지속적으로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 ○ 동 단체(예: 춤추는 빗자루 등)에서 자발적으로 계도 활동을 하고 있으나, 권한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음을 언급. ○ 동구청이 시범적으로 집중 관리 및 개선책을 마련하여, 민관 협력으로 단계별 대책을 수립하고 타 동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요청.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인력운영비 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 (지적사항) 인력운영비 예산이 실제 집행액 대비 과다하게 편성되어 매년 1억 원 이상의 대규모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요구사항) 차기 예산 편성 시에는 전년도 집행 실적과 실제 인력 운영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일 것. □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예방적 위생 행정 강화 ○ (지적사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사후 적발 및 처벌 위주의 위생 점검은 과도한 부담이 되며,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우려됨. ○ (요구사항) 단속 위주의 행정을 지양하고, 사전 지도 방문 및 위생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영세 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적극 행정을 펼칠 것. □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 ○ (지적사항) 동 행정의 주요 관심사가 시설물 유지보수에 집중되어 있어, 고독사 예방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요구사항) 각 동장은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을 적극 추진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반복적 감사 지적사항 근절을 위한 표준 업무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전산화** ○ (지적사항) 매년 동 종합감사에서 문서관리, 주민등록 관리, 수수료 부과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어 행정 신뢰도를 저하시킴. ○ (요구사항) 단순한 사례 전파를 넘어,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표준 업무 매뉴얼'과 '필수 체크리스트'를 구축하고 이를 전산 시스템화하여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민원 상담인 업무 환경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 (지적사항) 민원 안내 건수가 3년간 약 30% 급증하였음에도 인력 충원이나 처우 개선에 대한 검토 없이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며, 만족도 조사조차 실시된 바 없음. ○ (요구사항) 민원 상담인들의 업무 과중 여부, 휴게 시간 보장 등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고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덕 양 구	□ **구청장기 체육대회 운영 방식의 전면 재검토 및 개방형 공모 도입** ○ (지적사항) 수년간 반복된 의회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특정 종목에 한정하여 비공모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체육 예산 집행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행태임.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요구사항) 향후 구청장기 체육대회 계획 수립 시, 기존 관행을 탈피하여 모든 종목 단체에 참여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공개 모집 절차를 도입하고,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함. **□ 반복적 인쇄·고지서 용역의 통합 발주 및 경쟁 입찰 도입** ○ (지적사항) 매년 반복되는 고지서 제작 용역을 동일 날짜에 세목별로 분할하여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지속하는 관행은 계약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특혜 시비를 유발할 수 있음. 사업 부서가 건별로 요청한다는 이유로 계약 부서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임. ○ (요구사항) 자치행정과와 세무과 등 관련 부서는 협의를 통해 연간 발주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한 성격의 용역은 묶어서 '통합 발주'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 이를 통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여 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한 관리 및 홍보 강화 요청** ○ 2024년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실적 중 개발제한구역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한 신속한 원상복구 조치 및 향후 행정조치 계획에 대해 질의. ○ 덕양구 내 농지가 많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비율이 높아 불법 성토 문제가 빈번함을 지적. ○ 최근 내곡동 비닐하우스 침수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불법 성토가 농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2025년 1월 농지법 개정(농지 개량 행위 신고 기준 등)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필요성을 요청. ○ 농지 관련 부서(구청 농지팀)와 농업기술센터 간의 긴밀한 협조 및 영농교육 등에서 법령 변경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을 당부. **□ 농지법 개정사항 홍보 및 예방 활동 강화** ○ 농지법 개정(성토 기준 등)에 따라 농민 및 관련자들에게 변경사항을 충분히 안내할 것. ○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영농교육 등에서 법령 변경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 원당시장 주변 상습 무단투기 근절 및 주말 청소 대책 수립** ○ (지적사항) 원당대로변 등 주요 도로가에 주말 및 야간 시간대 시장 및 상가 배출 쓰레기가 방치되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CCTV 설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투기에 대한 행정 처분이 미흡하여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요구사항) 상인회 및 주변 상가 대상 간담회 및 CCTV를 활용한 실제적인 단속 및 행정 처분을 실시할 것. 또한, 청소농정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말 쓰레기 수거 대책을 마련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원 내 체육시설 안전 점검 및 성사체육공원 주차장 무료 운영 검토** ○ (지적사항) 성라체육공원 등 어르신 이용이 많은 체육시설의 유지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성사체육공원 주차장의 유료화 추진은 이용객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요구사항) 관내 공원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즉각적인 보수를 실시할 것. 아울러 성사체육공원 주차장 유료화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구청 소관일 경우 주민 편의를 위해 무료 운영 유지를 적극 검토할 것. □ **가로 청소 용역 예산 및 인력의 현실화 추진** ○ (지적사항) 청소 구역이 확장되었으나 용역 계약상 인력과 예산이 이를 반영하지 못해 청소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 및 근로자 노동 강도 심화가 우려됨. ○ (요구사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는 아니나 구청 차원에서 관련 부서(자원순환과)와 협의하여, 차기 용역 발주 시 확대된 과업 범위에 맞는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 □ **예산 오집행에 따른 결산 오류 소명 및 재발 방지** ○ (지적사항) ‘무원마을 녹지대 산책로 개선공사’ 등 특정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회계 처리 착오로 타 예산에서 지출되어, 결산서상 해당 사업이 100% 불용으로 표기되는 등 회계 질서가 문란함. ○ (요구사항) 해당 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실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향후 세부 사업별 예산 집행 시 비목 준수를 철저히 하여 결산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소상공인 대상 식품위생법 위반 예방을 위한 사전 계도 강화** ○ (지적사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사후 적발 및 과태료 부과 위주의 행정은 과도한 부담이며, 행정의 본질적 역할인 ‘보호’ 기능이 미흡함. ○ (요구사항) 단속 실적보다는 위반 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 홍보 및 계몽 활동 비중을 대폭 늘려,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성적 평가지표 도입** ○ (지적사항) 일선 행정력이 눈에 보이는 시설물 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제도권 경계선에 있는 위기 가구에 대한 발굴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홀할 우려가 있음. ○ (요구사항)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평가 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활동 및 실적 등 정성적 데이터를 주요 지표로 관리하고, 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보호망을 구축할 것. □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위한 표준 업무 시스템 구축** ○ (지적사항)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과 잦은 인사이동을 이유로 통장 위촉, 예산 집행 등 기본적인 행정 업무에서 동일한 감사 지적사항이 3년 이상 반복되고 있음. ○ (요구사항) 반복 지적 사례에 대한 ‘표준 업무 매뉴얼’과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전산화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인사이동 직후 담당자가 즉시 업무 유의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또한, 해당 시스템을 3개 구청이 공유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기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도 시 관 리 공 사	□ 주민 갈등(통장·자치회 위촉)에 대한 적극적 행정 중재 강화 ○ (지적사항) 신도시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선출 관련 민원이 반복되고 있으나, 행정기관은 법규 위반 여부만 판단하는 소극적 대응에 그쳐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요구사항) 단순 민원 처리(기각/종결)를 넘어, 지역 내 신구 주민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동장 및 담당 부서가 주민 화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갈등 관리 역량을 강화할 것. □ 체육시설 프로그램 수강 신청 방식 개선 ○ (지적사항) 수영장 등 인기 강좌의 경우 기존 회원의 재등록 기득권 유지로 인해 신규 회원의 진입이 극도로 제한되어 시민 불만이 지속됨. ○ (요구사항) 특정 기간 경과 후 모든 회원이 동등한 조건에서 다시 신청(추첨)하는 방식 등 다수의 시민에게 공평한 이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등록 시스템을 도입할 것. □ 중산체육공원 주차장 정기권 제도 변경에 따른 민원 대책 마련 ○ (지적사항) 주차장 정기권 운영 방침 변경(순환제 도입 등)으로 인해 해당 주차장을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인근 영세 상인들의 생계형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요구사항) 획일적인 제도 적용보다는 지역 상권 및 주차 여건 등 특수성을 반영하여,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대형 공연 개최 시 주민 소통 및 사전 안내 체계 개선** ○ (지적사항) 고양종합운동장 대형 공연 시 발생하는 소음 및 혼잡에 대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가 미흡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후 보상(쓰레기봉투 지급 등)보다는 사전 양해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 (요구사항) 향후 대형 공연 개최 시 기획사에만 맡기지 말고, 공사가 주도적으로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아파트 안내 방송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전 안내 및 소통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시설 안전 조치 강화** ○ (지적사항)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사 절차 등 행정적 처리에만 매몰되어 피해자에 대한 도의적 배려가 부족했으며, 성인 기준이 아닌 아동 등 안전 취약계층 눈높이에 맞춘 시설 점검이 미흡했음. ○ (요구사항) 사고 발생 시 관리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위로하는 등 정서적 케어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법적 분쟁과 별개로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적극 행정을 실천할 것. 또한, 시설물 안전 점검 시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객의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점검 체계를 마련할 것. □ **도시관리공사의 개발사업 확대 및 수익 창출 요청** ○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단순 관리 업무에 치중하고 있어 아쉬움을 표명. ○ GH(경기도시공사) 등 타 도시공사처럼 적극적인 개발사업 추진 필요성 강조. ○ 고양시의 재정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도시관리 공사가 자산 개발을 통해 수익 창출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대형 공연장 운영 및 안전관리 개선 요청** ○ 대형 공연 유치로 인한 수입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대형 공연 시 관람객 안전, 좌석 진동, 출입구 혼잡 등 안전 매뉴얼 및 대응체계 점검 요청. ○ 공연 후 시설(잔디, 의자 등) 파손 시 복구 책임 및 비용 부담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할 것 요청. □ **체육관 및 부대시설 민간개발·인프라 구축 제안** ○ 실내체육관 등 소규모 공연 및 행사 유치 확대를 통한 수익 창출 방안 제안. ○ 주차장 등 부대시설 민간개발 및 스포츠타운 조성 등 장기적 인프라 구축 필요성 제안. □ **정책 추진 시 소통 및 장기 비전 수립 요청** ○ 정책 방향 및 대형 프로젝트 추진 시 시의회, 집행부, 공사 간 적극적 소통과 협력 필요성 강조. ○ 고양시가 문화·스포츠 콘텐츠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 비전과 계획 수립 요청. □ **어울림누리 체육관 토요일 대관 합리화 방안 마련** ○ (지적사항) 어울림누리 체육관의 토요일 정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 시민의 토요일 대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대관 시 기존 회원 환불 등 행정 비효율이 발생함.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요구사항) 토요일 대관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3~4개월 전 사전 대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미리 공지하여 수강료 환불 절차 없이 원활하게 대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과 매뉴얼을 구축할 것. □ 성사체육공원 주차장 유료화 관련 이용자 간 형평성 확보 ○ (지적사항) 성사체육공원 주차장 유료화 전환 시, 고양국민체육센터 회원은 주차비가 면제되는 반면, 동일 구역 내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이용자에 대한 감면 대책이 확정되지 않아 이용자 간 차별 및 불공정 시비가 예상됨. ○ (요구사항) 유료화 시행 전 교통사업처 및 관련 부서와의 2차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이용자도 국민체육센터 회원과 동일한 수준의 주차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협의 결과를 별도 보고할 것. □ 종합운동장 잔디 훼손 복구 시스템 전면 개편 ○ (지적사항) 공연 기획사가 수행하는 부분 보수 방식은 잔디 품질 저하와 구장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며, 인조 잔디 도입 검토는 국제 경기 유치를 포기하는 근시안적 발상임. ○ (요구사항) 공연 계약 시 잔디 복구 비용을 사전에 징수하여 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보수 기금 적립형’ 모델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A매치 등 국제 경기 개최에 손색이 없도록 천연 잔디 관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탄현 노상 공영주차장 행정 서비스 감면 체계 구축** ○ (지적사항) 무인 유료 주차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관공서 방문 민원인에 대한 기존 감면 혜택이 시스템 미비로 축소될 우려가 있음. ○ (요구사항) 탄현동 행정복지센터 이용객이 확인증(바코드 등)을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1시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비하고, 운영 현황을 보고할 것. □ **기간제 근로자 계약 및 무기직 전환 관련 법적 검토** ○ (지적사항) 1년 단위 재계약 형태라도 실질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특히 55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등 법적 리스크가 존재함. ○ (요구사항)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의 연령 및 계약 갱신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여부 등 법적 쟁점에 대한 명확한 검토 보고서를 제출할 것. □ **대형 공연 유치 관련 주민 소통 프로세스 개선 및 중장기 계획 수립** ○ (지적사항) 대형 공연 개최 시 인근 주민에 대한 사전 고지 및 동의 절차가 미흡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잠실주경기장 공사 기간 이후를 대비한 고양시만의 공연 인프라 전략이 부재함. ○ (요구사항) 공연 개최 전 주민 설명회, 안내 방송 등 실질적인 사전 소통 체계를 의무화하고, 향후 5년 이상의 공연 거점 도시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인프라 개선 및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관련 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기간제 근로자 운용 실태 전수조사 및 고용 안정 대책 마련** ○ (지적사항)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 1년 단위 쪼개기 계약을 반복하는 것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취지에 역행하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음. ○ (요구사항)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 중 반복 계약자 현황(횟수, 기간)과 예외 사유(고령자 등) 적용 여부를 명확히 전수조사하고, 법적 리스크 해소 및 고용 안정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 □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전면 개보수 추진** ○ (지적사항) 주요 문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어 시설 노후화 및 운영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음. ○ (요구사항) 시설 운영 재개를 목표로 필요한 전체 수리 목록과 소요 예산을 산출하여,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전면적인 대보수를 실시할 것.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 없음

8. 주요 근거서류: 없음